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3. 1

국토교통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적절성 및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반영 유도

- 난이도 평가항목에 상위정책(국정과제, 업무계획 등)과 연계 정도, 결과 성격의 성과지표 설정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적절성 및 대표성 강화
- 세부평가기준에 자평위원·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성과지표 개선 회의, 과제 목표치의 적극성·신규추진 여부 등 반영

☐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만족도 평가 반영

- 정책 수혜자인 일반국민 및 전문가 등 1,391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계획 관리과제에 대해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

* 일반국민: 1,034명 / 전문가(학계, 연구원, 공공기관 등): 357명

** 용역기간: '22.11.23. ~ '22.12.12.

-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목표 달성도(성과지표의 달성도, 정책효과 발생 정도, 정책만족도) 배점을 60점으로 설정

☐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자체평가 체계 운영

- 연말평가(노력도, 달성도)시 관리과제 정량지표* 실적에 대해 내부 감사관실, 외부 위원회 등을 통해 중복 검증하여 객관성 제고

* 계획이행의 충실성(추진계획의 기한 내 완료여부),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성과관리과제 수립 체계를 과 단위가 아닌 정책관급 단위로 운영하여, 핵심정책 위주의 관리과제 구성·추진 및 정책성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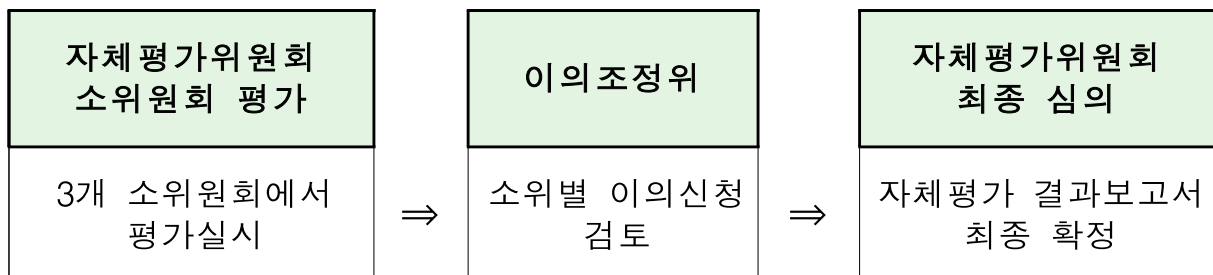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및 '22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조실)에 따라 자평위 구성·운영
 -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3개 소위원회, 21명)
 - 각 소위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의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소위별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조정**

□ 평가방법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인 평가 실시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22.7) → 과제 난이도 평가('22.9)→ 과제 이행 노력도 및 과제 목표 달성도 평가('22.12~'23.1)
- 평가 종료 후에는 과제담당부서의 평가항목별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조정위**(각 소위원장 등)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결과를 **심의·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22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총 42개 과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 (100)		비고
과제 난이도	○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정량화·결과성격의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 발굴 정도 (내외부 참여 검토회의 여부)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반영 여부 (추진계획 및 지표 반영 여부)	10	20	
	○ 성과지표의 난이도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이해관계자 의견대립 정도 ·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	10		
과제이행 노력도	○ 계획이행의 충실성	· 계획의 기한내 완료여부	10	20	
	○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여건·상황변화에 대응정도 ·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	10		
과제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20	60	
	○ 정책효과 발생 정도	·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 정책성과에 대한 홍보효과 감안	30		
	○ 정책만족도	· 일반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	10		

2. 평가결과

(1) 총 평

□ 총 34개 정책관급(183개 과) 中 **22개 정책관***(115개 과) 소관 **42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직할, 지방청 등 지원부서 제외

○ A등급 2개(4.8%), B등급 6개(14.3%), C등급 6개(14.3%), D등급 14개(33.2%), E등급 6개(14.3%), F등급 6개(14.3%), G등급 2개(4.8%)

구 분	2020년 도	2021년 도	2022년 도
관련 부서 수* (BSC 단위부서)	본부 20개 정책관급 (105개 과)	본부 등 22개 정책관급 (115개 과)	본부 등 22개 정책관급 (115개 과)
과제 개수	39개	39개	42개
지표 개수	180개	207개	223개
성과지표 목표치 평균 달성률	93.33% (12개 지표 미달성)	90.82% (19개 지표 미달성)	91.52% (19개 지표 미달성)
평균 점수(과제)	90.07	91.65	90.64
최대값-최소값(과제)	14.90	10.01	13.62
표준편차	3.35	2.50	2.56

○ 우수 과제는 ‘주거안정 기반강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미래 모빌리티 육성 및 택시산업 서비스 제고’ 등이며,

○ 미흡 과제는 ‘지적 분야 혁신을 위한 지적제도 정비 및 지적재조사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등으로 평가됨

□ 총 42개의 관리과제의 **22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1.52%**로

○ **20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일부 미달성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지연, 이해관계 대립 등 외생환경 변화 등으로 분석됨

* 다만, 법령 개정 목표인 경우 법안 국회제출, 소관 상임위 상정 등 지표의 부분 달성에 대해서는 달성 비율에 따라 등급화하여 산정(50~90%)

(2) 주요성과

① 신성장동력 확충

- (모빌리티)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운영, 모빌리티 시대 선도와 혁신서비스 일상구현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자율주행 시험운행지구 확대('21. 7곳 → '22. 16곳), 안전기준·관리 체계 등 기반 정비, C-ITS·정밀안전지도 등 인프라 구축
- (해외건설) 민관 원팀코리아 출범, 사우디, UAE, 인니 등 고위급 외교로 MOU 등 협력성과 도출 → 3년 연속 300억불 이상 수주
 - 두 차례 범부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대책 발표, 정책역량 집중

② 산업구조 개선 노력

- (건설산업) 건설자재 수급관리 방안 및 공급망 대응방안 마련,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통한 규제혁신 방안(16개 과제) 발표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 마련 및 현장단속 실시
- (물류산업) 화물운송시장 근본적 구조개선을 위한 협의체 발족, 유가 급등에 취약한 화물차주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③ 국민 주거안정 및 교통혁신

- (주거안정)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공급 청사진 마련,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수립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등 각종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거래 등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 (간선망 구축) GTX A·B·C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사업 연장 및 신규노선 건설 등 검토를 위한 기획연구 착수
 -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5곳) 선정, 사전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및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 상향 조치

(3) 개선·보완 필요 사항

① 산업육성 기반 구축

- (디지털트윈) 다양한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범사업(7개) 추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 기반마련 노력
 - 다만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는 보안규정 상 민간에 공개가 제한되어 자유로운 활용 및 산업발전 등에 한계 → 점점 및 개선 필요
- (항공제작) 헬기, 부품 등 국산화를 위해 인증 지원, 국내 항공사·수요기관 보급 등 추진하는 한편 ICAO 이사국 8연임 성과
 - 다만 중대형 항공기·엔진 제작은 기술장벽이 상당하여 가시적인 산업 육성 효과는 부족 → 기술개발 등 지속 지원 필요
- (철도기술) 하이퍼튜브 예타대상 선정 등 일부 절차 지연, 철도 클러스터는 예타 신청 등 추진 초기단계로 국민 체감도 부족
 - 예타통과 등 가시적 성과 발생시 홍보 강화 및 지속적 성과관리

② 국민 안전 강화

- (자동차 안전) 비상제동장치를 쏘차종으로 확대, 이륜차 일제조사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최근 전기차 사고 등으로 국민 우려 상존
- (건축안전)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기준 강화, 해체공사 내실화, 방치건축 정비 등 제도개선 노력
 - 단, 실제 현장 대응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있어, 허가권자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을 활용해 보완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I.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1. (Compact) 지역 주도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① 새로운 성장공간전략 조성으로 균형발전 실현	C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G
	③ 기존 혁신거점 고도화 및 산업기반 확충	D
	④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및 노후 신도시 재정비 추진기반 마련	D
2. (Network) 지역 중심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한다.		
	①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항 생태계 조성	E
	②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공항 기능을 가진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F
3.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 분야를 혁신한다.		
	① 탄소중립, 문화진흥 등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혁신	D
	② 도심 녹색공간 확대 등 탄소중립도시 조성	E
	③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도시 조성	D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Ⅱ.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新산업을 육성한다		
	① 미래 모빌리티 육성 및 택시산업 서비스 제고	A
	②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건설Eng 고도화를 통한 건설 생산성 혁신	E
	③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건설 고부가시장 진출 확대	B
	④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C
	⑤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 지원	B
	⑥ 국내 드론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 및 UAM 기반조성·그랜드챌린지 추진	D
	⑦ 국토·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 기반 마련	F
2. 기존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①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 및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B
	② 물류산업 종사자 처우 및 불공정 관행 개선	B
	③ 자동차 소비자보호·안전 강화 및 新시장 육성	F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산업 조기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C
	⑤ 항공제작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공리더십 강화	F
	⑥ 세계 수준의 철도기술을 확보하고 철도산업성장을 가속화	F
	⑦ 지적 분야 혁신을 위한 지적제도 정비 및 지적재조사 추진	G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Ⅲ.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1. 민생안정 및 주거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① 살기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C
	②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D
2. 도심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① 주거안정 기반 강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A
	②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거주자 중심의 주택 건설·관리	C
	③ 공공주택 지속기반 마련을 통한 주택공급 가시화 추진	C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제고	B
	② 부동산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D
Ⅳ.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 구현	D
	② 광역교통망 혁신(연계성 강화)을 통한 대도시권 교통복지 실현	F
	③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충	B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2. 교통망을 확충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① 국가간선도로망 확충과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도로서비스 구현	D
	② 양질의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및 경쟁력 확보	E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OECD 평균 이상의交通安全 수준을 달성한다.		
	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 구축	D
	② 미래 도로환경 대응체계 확립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E
2. 첨단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간교통망을 조성한다.		
	① 철도안전관리기반 고도화 및 차량·시설의 첨단화를 통해 사고·범죄로부터 국민보호	D
	② 정밀 항행위성서비스로 안전한 공항 환경조성 및 4차 산업발전	D
	③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이용체계 조성	D
3. 건설 현장 위협요인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①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저감 예방 추진	D
	②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E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I-1-①

새로운 성장공간전략 조성으로 균형발전 실현

C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등 대도시권 육성》

-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안 발의(10.20) 및 공청회(11.10) 완료하였으며, 관계부처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종합방안 마련(12.29)
- (기업혁신파크) 기업 대상 설명회(5월-전경련, 6월-건설협회), 지자체 설명회(대전·울산·광주, 7월),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개정안 발의(12.28)
- (캠퍼스 혁신파크) 3개 부처(국토·교육·중기)가 협업하여 기존사업(5곳)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량있는 지방대학(2곳) 신규 선정('22.6)

《소외된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낙후지역의 삶의 질 불균형 해소》

- (융복합클러스터) 중소도시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교통·산업·주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대상지 3곳 선정(12.9)
- (지역발전투자협약) 내실있는 시범사업(11건) 추진을 위해 균형위, 관계부처 합동 상·하반기 추진상황점검 회의 개최(3.29/12.19)
- (생활거점 조성) 낙후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거점 사업 대상지 10곳 선정(8.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새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거법(국회 계류중) 통과 필요
-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 중 수요가 높은 사업(융복합 클러스터 등)의 경우 많은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정책 수요자들이 다양한 공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복지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등 부처간 연계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고, 도심융합특구, 융복합클러스터 등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새로운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시도로 융복합클러스터 사업구조 정립 등 난이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부울경 협력회의 등 현장방문과 지자체 면담 (60여회)을 통해 의견수렴하여 정책추진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투자선도지구 지정, 생활거점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역수요에 맞는 거점 육성 노력
3-3. 정책만족도	9.0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116번), 방위사업청 및 기 이전이 확정된 기상청+3개 기관 등 개별이전* 추진

* 1차 이전 완료 : 기상청('22.2, 346명), 특허전략개발원('22.9, 64명)

* 이전계획 승인 : 방위사업청('22.11), 입업진흥원('22.12), 기상산업기술원('22.12)

- (입지심사제 도입) 신설공공기관 입지심사제 시행을 위한 입지계획안 포함 내용, 구체적 심의 절차 등 제도화(균특법 시행령 개정, 6.21)

- (클러스터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혁신융합캠퍼스·혁신 공유오피스 조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입주기업 수 대폭 증가

* 입주기업 수 : ('21.말) 2,047개 → ('22.6월) 2,700개

- (정주여건 개선) 복합혁신센터,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인구*와 가족동반 이주율(67.7%, 전년대비 1.2%p↑) 증가

* 정주인구 : ('21.6) 229,401명 → ('22.6) 232,632명, 전년대비 3,231명(1.5%) 증가

- (지역상생 발전)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을 추진하여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2년 우선구매 20,739억원 달성('21년 14,404억원, 전년대비 6,335억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대비 교육부문 경쟁력이 낮고 상대적으로 민간기업도 부족한 상황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복합혁신센터를 설립하여 문화·복지 등 정주여건도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B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인재 채용률, 지역물품 우선 구매 등 다수 정량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입주기업 수 등 최근 추세치 대비 목표치 증가율 향상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7.5%	· 정주여건 개선 홍보, 도침산단 지정, 복합혁신센터 준공 등 일부과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전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추진 개선방안 마련,
3-1. 성과지표 달성도	95%	· 복합혁신센터 준공 개소 목표치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 대전이전으로 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인구·기업·지역청년 채용 증가
3-3. 정책만족도	9.3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기존 혁신거점 고도화 및 산업기반 확충》

- (행복도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근거 마련
행복도시법 개정(6.10), 세종테크벨리 8차 분양 완료(11.2)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승인(11.23), 국회세종 의사당 건립 등을
반영한 행복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추진
- (새만금) 첫 도시인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6.14) 및 남북도로 1단계 준공(12.28)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노후산단 리뉴얼)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10.31)
및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추진계획 수립(12.29)
- (산단 대개조) 공모를 통해 노후산업단지 대개조 신규사업 5곳 선정(4.26)
- (스마트그린 산단) 탄소중립 및 혁신성장 산단의 성공 모델을 제시
하기 위해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7.8)

《수도권 관리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성과 확대》

- (수도권) 수도권 관리수단 중 핵심제도인 '과밀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12.20), 수도권정비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고시 개정(11.24)'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행복도시) 도시·산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지속적인 제도 완성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간 중재가 필수
-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특화방안 및 수변도시 분양전략을 구체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행복도시 제2집무실, 새만금 수변도시 등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스마트 그린산단, 행복도시, 새만금 등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난도 있는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행복도시 제2집무실 합동 건립계획 발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지원 등 과제 수행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9%	· 규제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절차 일부 지연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새만금 남북도로, 산단대개조 10개지역 범부처 패키지 지원 등 성장거점 육성 노력
3-3. 정책만족도	9.2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문가 자문회의·토론회, 제도개선 수요조사, 시·도 국장급 간담회 등을 거쳐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마련(7.27)
-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6.10)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12.11)
- 혁신지구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혁신지구 확산모델 개발 연구(9.26~)를 추진하고, 혁신지구 신규 후보지를 10곳 발굴(12.22)
- 지자체 설명회(7.28, 9.1) 등을 통해 개편된 지역특화재생사업을 설명하고 공모사업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사업 15곳 선정(12.16)
- 기존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생활SOC 등 세부사업 500곳 이상 공급
- 원활한 도시재생 업무 추진 및 추가된 신도시 정비업무 반영 등을 위해 사업단 별도정원 기간 연장 및 부서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7.1)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발족(5.30) 및 격상·확대(8.30)
-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국토부-지자체가 병행수립(~24년)하고 특별법을 '23.2월까지 발의하기로 발표(장관-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9.8·10.24)
-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 착수(11.1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신속한 정비 요구, 국토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총괄기획가(MP) 등을 통한 소통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마련, 혁신지구·지역특화재생사업 등 대표성 있는 과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신도시 재정비 관련 지자체 이의제기, 지역주민·지역구간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 등 난이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1기 신도시 단체정·장관 간담회 등 현장의견 적극 수렴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마련,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구성
3-3. 정책만족도	9.42	

(1) 평가결과

□ 주요 성과

- (주요 신공항 건설) 제주 제2공항 전환평 재협의 착수('23.1),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고시('22.6), 울릉공항 사동터널 개통완료('22.7) 등
 - * 대구경북 신공항은 사타조사 용역,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지자체 건의 및 쟁점사항 조율
- (미래 공항정책 수립) '공항분야 미래비전 2040(안)' 수립('22.12), 공항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공항수용량 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22.12)
 -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 마련('22.2), 인니 바탐 공항 위탁운영 실시('22.7~),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타당성 조사('22.1~'22.12) 등 해외사업 수주 성과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주요 신공항 건설)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군 공항 이전 관련 선행절차 추가 기간 소요 등 여건 변화로 일정 일부 지연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최근 급격한 물가·금리 인상 등 경제여건과 제3연륙교 통행료 미결정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외부여건 변화
 - * 고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한 인하방안 검토를 위해 별도 용역 시행 후 인하방안 검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SOC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항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신공항 건설 추진, 공항사업 해외진출, 공항산업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해외공항 사업성과는 3배 이상 목표치 향상 등 적극적 목표설정, 이해관계 대립으로 난이도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4.5%	· 대구공항 민항 이전 사타용역, 공항시설법 개정안 마련 등 일부 추진과제 지표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신공항 관련 유관부처 이견 조율, 자재 수급난 상황에 적기 대응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공항분야 전문인력 양성전략 마련, 신공항사업 관계기관 협의 지속 등 정책효과 창출
3-3. 정책만족도	8.73	

I-2-②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공항 기능을 가진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F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정과제-39) ‘빠르고 편리한 교통의 혁신’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사타완료) 공사 기간, 사업비 및 B/C, 부지조성 등 최적의 입지와 장래 항공수요 대응 등에 관한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22.4.18)
 - (예타면제)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22.4.21),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22.4.26),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22.4.29)
 - (기본계획 착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착수(“22.8.31)
- (선제적 쟁점관리) 신공항 조기 개항, 사업관리, 건설공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전문가 토론회(6회), 자문위원회(6회) 개최
 - (정례협의회) 공항복합도시 등에 대한 지역활성화 방안 지자체 정례협의회(3회) 개최 및 보상 관련 주민지원 민관협의회(2회) 참석
 -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고, 지역 주민·환경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10.19) 및 평가항목 공개(11.7~11.21)
 - (보상관련) 기본계획 고시단계에서 보상이 가능토록 특별법 개정안 발의(10.26) 및 총사업비에 주민지원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기재부 협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실질적 정책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실현되어 체감·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조기개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회·지자체 등 신공항 조기개항 요구에 적극적 공기 단축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
- (갈등관리) 이주대책, 어업피해 보상 등에 대한 주민갈등 및 환경 훼손에 따른 환경단체 반발 등에 대하여 선제적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공항건설 과정 관련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신공항 관련 사회적 갈등, 신공항 입지로서의 한계가 있으나 단기에 절차를 완료하는 적극적 목표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지자체 정례협의회 개최, 지자체가 추천한 자문 위원 위촉 등 상시 소통체계 구축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계획 국무회의 통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원활한 절차 추진
3-3. 정책만족도	8.0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로에너지건축)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단계적 강화를 위해 ZEB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12월)

* '23년 :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 5백㎡ 이상,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 (그린리모델링) 취약계층 이용 노후 공공건축물 575동(공사비 지원) 및 민간건축물 7,217건(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 (목조건축) 탄소 감축 효과가 높은 목조건축을 공공건물 등에 활성화 하기 위해 산림청, 행복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MOU 체결(10월)

- (건축산업) 설계·감리 등 건축서비스산업 파악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건축정보 허브* 구축 착수(7월) 및 산업 통계 구축(12월)

* 건축 인허가, 에너지사용량, 유지관리, 해체 등 건축물 관련 정보 통합 제공

- (건축문화) '건축의 날'을 단순 시상 외에도 영화제, 답사 등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국민참여 건축행사로 개편(10월)

- (건축규제 정비) 국민 불편 해소 및 각종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심의 절차 개선*, 용도 정비 등 건축규제 개혁 과제 마련(12월)

* 他분야 심의와의 중복 및 상반되는 의견은 위원장이 심의결과에서 배제 등

- (행정시스템 재구축) 전국 245개 지자체에서 분산 운영중인 건축 행정시스템(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고 기능 개선(12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지원대상 확대 및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금리 상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대상 확대, 건물부문 탄소 중립 로드맵 마련 등 환경 대응성 제고를 위한 지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협의, 건축산업 관계자 의견수렴 등 난도있는 이해관계 협의과정 필요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 건축규제 간담회·세미나 개최 등 현장 의견 수렴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6%	·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 지원, 이차지원사업,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등 일부지표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준공, 그린리모델링 전문 인력 양성, 클라우드 세움터 구축 등 기반 마련
3-3. 정책만족도	9.9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용산공원) 미국 측과의 적극협의를 통해 '22년말 기준 용산기지 전체면적의 **31.4%**(76.4만m²/총 243만m²) **부분반환 성과달성**
 - 지속적인 시설정비, 국민참여 행사개최 등을 통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과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 연도별 방문객수 : ('20.8~12) 5,222명 → ('21년) 66,250명 → ('22년) 200,398명
- (수소도시) 수소시범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 본격 조성중으로, 해당 지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소도시 6곳 신규 지정 완료('22.12)
- (탄소중립도시 조성) 탄소중립도시의 개념 및 계획 요소, 사업추진 및 국가지원 등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22.12.)
 - 지역의 탄소중립 도시정책을 지원할수 있도록 지역·도시 단위 탄소모니터링이 가능한 탄소공간지도 구축('22.12)
 - 도시지역 내 탄소흡수원 증대를 목표로 GB 관리, 도심내 공원·녹지 확대 방안 등 도시탄소흡수원 2050 중장기 로드맵 마련('22.1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등 일부 지표가 당초 목표일정보다 지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들이 임시개방 부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위해요소가 없도록 위해성 저감조치 및 모니터링 등 철저히 관리 추진
-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온전한 기지반환 및 용산공원 조성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GB 훼손지 복구 활성화 방안 마련,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GB 훼손지 복구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의견대립 참여, 용산공원 개방 관련 다수 관계자 소통 필요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7.9%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지표가 당초 목표일정보다 일부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방문,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용산공원 시범개방 의견수렴 추진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수소도시 추가 선정, 용산공원 부분개방 등 도심내 녹색공간 확대 효과
3-3. 정책만족도	9.6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도시계획혁신) 도시기능 융복합을 위한 용도지역제 개편*,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 수립 활성화 등 도시계획체계 개편 추진

* ①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가능한 도시혁신구역,
 ②용도지역 변경 없이 허용 건축물 용도를 다양화하는 복합용도구역
 ③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공공생활서비스 제공하는 입체복합구역

- (국가지범도시) 세종 시범도시 사업시행자인 민관 SPC 설립을 완료('22.5)하고, 부산 스마트빌리지* 입주완료('22.1) 및 리빙랩 운영
- (해외진출 지원)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SCEWC 2022, K-City 네트워크 등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수출 상담 후 현장 계약액 223억원 및 계약예정액 837억원, 국내 구매 계약예정액 118억원 등 역대 최대 비즈니스 성과달성
- (SCEWC) 한국관(4,000여명 방문)을 운영하여 해외투자자·정부와 기업상담(100여건) 및 국내 새싹기업-스페인기업 간 MOU 체결 등 성과
- (K-City 네트워크) 총 21개 국가에서 33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솔루션을 해외에서 실증

- (지역여건개선) 그간 120여 건의 스마트시티 실증·확산을 지원, '22년 한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등 35건의 사업을 신규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스마트솔루션 등 체감성과 제고 및 전국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시데이터를 연결·분석하여 도시관리와 서비스를 제공(예 : 확진자 역학조사지원 등)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 확대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도시계획 체계 개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선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보급 등 다수지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도시계획 개편방안 마련, 메타시티 아이디어 공모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한 도전적 과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7%	·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안 마련 일부 절차 추진시 다소 미흡한 부분 존재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도시계획체계 개편 관련 지자체 협의회 등 현장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 신규 추진, 월드스마트 시티 엑스포 개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규 과제 추진
3-3. 정책만족도	9.5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모빌리티 혁신 체계)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와 혁신 서비스 국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수립('22.9)
 - 이때, 국민 체감 과제 발굴을 위해 장관·민간 전문가를 공동長으로 하고, 전원(27인) 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추진 운영('22.6~)
- (그린 모빌리티) 탄소 배출이 많은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 및 지원방안 포함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 마련('22.12)
- (플랫폼운송사업) 택시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22.7), 플랫폼 기반 자발적 택시 합승을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급증한 택시 수요에 대응해 탄력요금제 도입 등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10.4) 및 후속조치 적극 추진
-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안전성·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 등 대중교통 혁신을 담은 「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22.3)
 - (공공성 강화) 고속버스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노선버스 비효율성 개선('22.9)
 - (안정성 강화) 버스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및 버스 기사 특별지원 등 고용유지('22.3), 전세버스 수급조절 고시('22.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버스업계 경영악화로 인해 노선감축, 버스감차 등으로 대중교통 사각·취약지대 증가
 - 어려운 버스업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등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미래 모빌리티 추진시 新·舊산업간 충돌 여지, 택시플랫폼 관련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 난이도가 높은 요소가 많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수소교통복합기지 시범사업 운영 등 일부 지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운영, 심야택시난 대책 관련 토론회·업계 간담회 등 주요정책 의견수렴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자율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수립, 심야택시난 대책 발표결과 심야시간대 배차성공률 상승
3-3. 정책만족도	9.3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 혁신 위해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5개 추진전략 및 15개 중점과제 마련(22.12)
- (BIM 시범사업) BIM 시범사업(4건) 성과보고회(‘22.6)로 성과를 검증하고, BIM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선순환 체계 마련
- (산업생태계 조성) 뛰어난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새싹기업들의 지원 확대를 위해 창업지원센터 증축(7월)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73→90개)
- (PM 활성화) PM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PM 시범사업을 확대(‘21: 2건 → ‘22: 4건)
- (Eng. 산업육성) 설계사의 통합역량을 높이기 위한 설계 주도형 턴키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2.9),
 - 기존 국내 Eng. 실적 외 해외 Eng. 실적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하여 해외 진출 지원(해건협-건엔협 MOU 체결, ‘22.11)
- (기술형 입찰) 기술 중심 평가인 기술형 입찰 확대를 위해, 운영 규정(‘22.6)·건진법 시행령 개정(‘22.9)으로 심의 공정성·전문성 향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간이중심제 도입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계약제도 전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성과목표 변경되며 일부 지표 미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 이행 과정에서 설계/시공/감리업계는 물론, 첨단기술 개발업체 등 참여 주체와 긴밀한 협업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PM·BIM 활성화를 위한 지표 선정, 스마트 턴키 선정, PM 시범발주 등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스마트 턴키 선정 건수, PM 시범사업 발주 건수 확대, 공공공사 BIM 조기 도입 등 적극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간이중심제 관련 엔지니어링 중심제 심사기준 과제 관련 일정 일부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기술진흥 기본계획 공청회, 스마트건설 종합 대책 업계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PM 시범사업 추진으로 업계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확산
3-3. 정책만족도	9.5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외실적) 22년 러-우 전쟁 상황,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310억불을 수주하여 3년 연속 300억불 이상 수주를 달성
- (수주대책 마련)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8), 제1차 수출전략회의(‘22.11) 등에서 수주 활성화 및 업계 지원계획 등 종합대책 수립·추진
 - *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발표(‘22.8.31,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 (고위급 수주지원) 사우디 메가프로젝트 네옴시티 등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수주지원단을 즉시 파견하여(‘22.11) 홍보·협력 강화
 - 빈살만 왕세자 방한(‘22.11) 시 총 26건의 MOU 체결 등 사우디와의 인프라 외교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
 - G20 계기 인도네시아 수주지원단 출장(‘22.11)에서도 신수도 이전 협력, 철도 인프라 MOU 체결 등 우리기업 수주기반 강화
-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우리기업과 해외 각국 인사·주요 발주처와의 네트워킹 지원(‘22.8)
-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21~‘25)의 실행계획(4월) 마련 및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 2.0」 수립(‘22.6)하고, 우리기업 수주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중점전략과제 발굴 선정(12월)
- (통합정보시스템) 기관별 분산된 해외건설 정보를 체계적 수집 및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2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6~), 시범운영(‘22.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PPP사업 진출 확대 노력) 해외투자개발사업(PPP) 투자 내실화 및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여도가 높은 인프라 분야로 진출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PPP사업 투자, 전문인력 양성, 수주지원단 파견 등 다수 대표성 있는 정량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횟수 확대,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 KIND 기능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 도전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발주처 협상 지원 등 업계 애로해소 노력, 해외 시장 진출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해외수주 활성화 전략 발표
3-1. 성과지표 달성도	98%	· 신규 PPP사업 투자건수 목표치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수주지원단 파견, GICC, 한-사우디 주택포럼 등 방한행사 추진, 다수 MOU 체결로 수주기반 마련
3-3. 정책만족도	9.7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민간투자 활성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시행하여 총 33개 인증(~'22.12.)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최대 2%p 이자비용 지원
- (도시물류 디지털화) 교통 혼잡, 배송불가 등 도시 물류 문제를 해소하는 디지털 물류실증 조성지원 사업('22년 5개) 시행 중
- (물류 R&D) 아파트 내 무인 자율주행 배송로봇,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물류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혁신과제 2개 신규 착수('22.5)
-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초단시간 배송 등 미래를 선도하는 물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촘촘한 물류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22.12)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도심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 이용하는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22.3, LH)
- (생활물류 로드맵 마련) 생활물류산업 발전의 기본방향을 위한 5개년 법정계획인 '생활물류산업발전 기본계획('22~'26)' 최초 수립('22.12)
- (첨단 운송수단 활용) 미래형 물류 기술의 상용화 대비 드론·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에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 발의('22.11)
- (우수 소화물배송 인증) 종사자 사고 예방 및 권익보호,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가 우수한 8개 소화물 배송 사업자 최초 인증 실시('22.10)
- (국제물류 세계총회 개최) 물류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최대 규모의 국제 물류행사를 총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2천명 참석(부산, '22.9)
- (충전 인프라 확보) 대형화물차용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 (울산, '22.12)하고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민간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제 평가기준 및 컨설팅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스마트 물류센터 투자액, 디지털물류 실증지원, 화물차 수소충전소 최초구축 등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생활물류 스마트화,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생활물류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등 적극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8%	·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 컨퍼런스 업무 추진절차 중 다소 일부 추진업무 미흡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생활물류 정책협의회·공청회·간담회, 물류혁신 R&D 협의체 개최 등 업계 소통 지속
3-1. 성과지표 달성도	97.5%	· 스마트물류센터 투자액 목표치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스마트 물류센터 추가 인증, 스마트물류 인프라 로드맵 마련, 물류 창업기업 지원
3-3. 정책만족도	9.4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미래차 전환 대비 중장기계획) 제3차 자동차기본계획('22~'26) 수립(12.29),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 로드맵 마련(9.19)
-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한 규제특례지구 확대('21 7곳→'22 16곳), 민간기업에 자율주행 차량 제작 등 비용 지원(총 80억)
- (미래차 안전관리) 레벨3 자율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11.21), SW업데이트·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마련(12.29)
 - 무선업데이트(OTA) 허용방안 발표(12.1), C-ITS 통신간 해킹 방지, 익명성 보장을 위한 인증관리체계 법적 기반 구축(1.28)
- (미래차 산업 육성)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유차 등 레벨4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범부처 R&D 추진, 스타트업 창업·연구공간을 제공하는 미래혁신센터 구축(9.28)
- (미래차 인프라 구축) 車-車-도로 간 실시간 통신인프라(C-ITS) 확산 위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 등 800km 구축(누적 1,776km), 전국 일반국도 소 구간 정밀도로지도 구축(누적 26,763km)
 - 기존 CNG 내압용기 검사소를 수소차 복합검사소로 전환(16→22개소) 완료(12.20), 수소차 전용검사소 구축(울산, 12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민 체감사례 확산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수소차 검사소 구축대수, 임수운행 특례 허가 , C-ITS 구축도로 등 정량지표 다수 포함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C-ITS 구축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 목표 설정, 배터리 안전체계 마련사업계 이해관계 참여 등 난도 있는 과제 선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배터리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C-ITS 전년대비 330% 확장
3-3. 정책만족도	1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산업육성) K-드론시스템(한국형 UTM) 실증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실증지원 사업*으로 활용모델 발굴 및 우수기술 검증 지원
 - * 드론 실증도시(9곳), 드론 규제 샌드박스(14개 기업), K-드론시스템 실증(7개 기관)
-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22.3, 전주), 전용비행시험장(의성, '22.11 착공) 추가 등 개발지원 인프라 구축 및 UAM법 제정추진('22.8 발의)
- (적극행정)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구성→표준약관 마련('22.11)으로 국민권익을 제고하고 드론성능 시험성적서 발급서비스*를 신설('22.7~)
 - * 객관적 성능검증 방법이 없는 25kg 이하 드론에 대해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구매처의 별도성능인증서 요구 등 납품업체의 애로점 해소
- (안전관리강화) 안전한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드론관리법 제정안 발의*('22.4), 드론 안전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22.12)
 - * 드론 식별장치, 안전사고 보고, 기술기준 등 드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근거 신설
- (해외시장개척) 드론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 해외시장 창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한 해외 실증 및 국제행사 참가 지원
 - * 투자 설명회('22.2, '22.11), 해외 실증지원 지원(6개 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3개 행사 참가, 17개 기업), 국제심포지엄 참가 지원(2개 기관) 등
- (국민홍보) 드론·UAM 박람회 등 정책성과 홍보('22.7), 신산업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UAM 국산기체 비행시연 개최('22.11)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드론 활용산업의 빠른 상용화를 위한 정책지원책 재점검
 -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3~'32) 마련 시 재점검 예정('23.3)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UAM 특별법 제정안 마련, 드론전용 비행장 시험장 이용업체 수 등 대표성 있는 과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UAM 특별법 제정안 마련, 드론·보험·사고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이해관계자 다양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UAM 팀코리아 전략포럼 개최, 드론분야 업계 간담회 및 온라인 공청회 등 개최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드론 실증지원 사업 추진, 드론 안전관리 강화 및 인프라 구축
3-3. 정책만족도	9.1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지털 트윈 기반 마련)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공간, 행정 등)를 통합·서비스하고, 협업·시범 사업을 통해 활용 구체화
* (협업) 환경부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시범) 울산, 청주시 등 지자체 시범사업 7개
- (지하 안전 강화) '22년 77개 郡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여 全 국토(전체 市, 郡)에 대한 안전한 지하 개발·관리·활용 기반 마련
- (공간정보 품질관리) 298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데이터 오류개선(72%)을 통한 품질 신뢰도 향상
- (공간정보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대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참여형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소통채널 다각화
- (기업 지원) 잠재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투자펀드 신규 조성 ('22.9 펀드결성, '24년까지 30억 출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10.4~12.22) 추진
- (인재 양성) 공간정보 SW·프로그래밍·DB 구축 등 핵심 역량을 교육하여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재 양성 추진
- (판로개척 지원) 해외진출 로드쇼, 스마트국토엑스포(11.2~4) 등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 기관·기업 간 교류·소통과 비즈니스 장을 제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디지털 트윈 등 활용·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노력했으나 민간 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관리 기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간정보 개방 확대)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되,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 보장을 위해 보안관리 기준의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공동활용, 지하공간정보 구축 확대 등 디지털트윈 기반마련을 위한 지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디지털 트윈국토 교육, 대국민 서비스확대 등 신규과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디지털 트윈국토 활용 지원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일정 다소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디지털트윈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채널 신설·운영, 공간정보 인재양성 등 현장과 소통강화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으로 업무 효율화, 맞춤형 컨설팅 추진하여 매출·고용·투자유치 수치 상승
3-3. 정책만족도	9.4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건설산업 혁신) 업역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업계 간 합의서 도출 및 발주 세부기준 개정('22.6)
 - 민관합동으로 규제혁신 TF를 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방안(16개 과제) 발표('22.8)
- (공정질서 확립) 하도급 규정 위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건설 지원센터 법제화 및 신고포상금제 등 도입('22.8, 건산법령 시행)
 - 시장교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색출하기 위해 국토부·산하기관 공사 대상 상시단속체계 구축 및 단속('22.4~)
 -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범부처 합동(국조실·국토부·경찰청 등) 근절대책 마련 및 현장단속 실시('22.7~)
- (근로환경 개선) 기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리전문기관을 지정(22.10) 및 맞춤형 교육 단계적 실시(6개 공종 우선도입, '22.12~)
 - 임금체불, 공사대금 유용 방지를 위해 대상자별(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자재·장비업자 등)로 구분지급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 정비('22.7)
- (자재·장비 관리) 주요 건설자재(철근, 시멘트 등)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급관리 방안('22.4), 공급망 대응방안 발표('22.5)
 - 노후장비 검사주기 단축, 안전검사 미수검 장비에 검사 및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시행('22.8)
 - 기계설비(냉·난방, 환기설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배포('22.9) 및 유지관리자 직무교육 실시(10,000여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상호시장 완전개방('24.1~)에 대비하여 종합·전문업체 간 의견조율 및 보완방안 검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등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페이퍼컴퍼니 단속, 부실 타워크레인 조사, 공제조합 목표수익률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과제 다수 선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페이퍼컴퍼니 단속건수 등 새로운 지표 선정, 공제조합 수익률 대폭 향상 등 적극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종합·전문업계 TF 운영·면담, 페이퍼컴퍼니 단속 관련 현장 간담회 등 현장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8%	· 공제조합 수익률 목표치 일부 미달성, 불법하도급 제도 개선, 골재품질 기준 강화 추진 일정 일부 지연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불공정 행위 신고 활성화, 페이퍼컴퍼니 입찰 참여 감소, 건설기계 사고 30% 감축
3-3. 정책만족도	9.4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전운임제 제도개선)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방향 등 국회 논의 필요사항을 민생경제특위에 보고('22.9)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11.24~12.9, 16일간)를 계기로, 화물운송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제도 발족('22.12)
- (고유가 대응) 유가 급등에 취약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유가보조금에 더해 “유가 연동 보조금”제도 도입·시행('22.5~'22.12)
- (부정수급 방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합동점검 연 2회 실시 및 규모를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방안 마련
- (화물차 적재안전) 폐쇄형 적재함도 이탈방지 조치 의무화, 화물 특성별 적재방법 세부기준 마련 등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강화('22.1)
- (물류창고 화재 안전) 사업자가 물류창고 등록 시 자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22.6, 물류창고업 등록규칙)
- (화물운송업 지원) 진개덤프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를 유형이 유사한 다른 차종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개선('22.6)
-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택배물량 집중이 예상되는 기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점검
- 현재 자유업으로서 기초자료가 전무한 배달업의 선진화·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배달업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대국민 공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향후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선 관련 협의체 운영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안전운임제·지입제 방향 설정, 화물차·물류창고 안전강화 등 대표성 있는 지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 마련 등 고난이도 과제 포함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대응,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추진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유류비 부담 경감, 화물차 적재 단속으로 안전의식 고취
3-3. 정책만족도	9.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비자 보호) 자동차 보험료 누수 방지를 위해 입원료 지급제도 개선(11.14), 뺑소니, 음주·약물 등 사고시 가해자 책임 강화*(7.27~)

* 중대법규 위반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개선 (부담금 상한 : 대인 1천만원→1억 5천만원, 대물 500만원→2천만원)

-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제작결함 조사대상 선별기준 및 리콜가이드라인 마련(12.21)

- (안전관리 체계 강화) '비상제동장치'를 쏘차종으로 확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기존 차對차 이외 차對보행자 감지도 의무화(10.26)

- 이륜차 일제조사(2.24) 및 검사제도 도입(6.28),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화물차 안전기준 강화(10.26), 민간검사소(383개소) 특별단속 실시(6.11월)

- (新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인증 절차를 완화해 제작자 부담 경감(4.14), 부품 품질 인증대상 확대(13종 추가), 부품 및 튜닝카인증센터 구축

- 튜닝페스티벌(5월), 오토살롱위크(9월) 추진, 인증부품 검색시스템 마련(9.30)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리콜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나, 심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미달성

* 통상적인 소요기간대로 입법예고(8.29~10.11), 규제심사(10.21)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상환자의 장기치료(4주 이상)시 진단서 발급 등 제도개선 추진, 미스터리 쇼퍼(자동차검사역량평가) 제도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자동차 보험 정상화, 리콜 이행령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민간검사소 점검대사 확대 등 다수 지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자동차 보험 정상화 관련 업계간·의료기관간 참여한 의견 대립, 신속한 리콜 관련 업계 이해 관계 조정 등 난이도 높은 과제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자동차 보험 관련 협의체 운영, 소형화물차 제작사·전문가 의견수렴
3-1. 성과지표 달성도	9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일부절차 추진일정 지연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으로 보험금 지급액 감소, 리콜 정보 등에 접근성 강화
3-3. 정책만족도	9.4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제선 회복) '19년 대비 약 94% 감소했던 국제선 여객은 50여 차례 관계부처 협의와 국제선 정상화 대책발표*('22.4, '22.6)에 따라 국제선은 꾸준히 회복하여 운항횟수는 '22.12월 약 57% 까지 회복
 -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공항 국제선은 폐쇄(인천공항 일원화) 되었으나, 국제선 운항 정상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7개 지방공항 운영재개
- (고용안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및 특별고용업종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56,286명(누적)에게 811억원을 지원('22.10월 기준)
 - 이에 따라 고용률 98.6% 유지('21년말 37,270명→ '22.11월말 36,757명)
- (KE-OZ 기업결합) 우리 공정위 승인('22.2)과 함께 싱가포르(2.8), 호주(9.2), 영국(11.26, 사실상 수용), 중국(12.26) 등 '22년 4개국 승인 완료
- (원스톱 보안서비스) 김포·김해·제주공항에 도입된 효과를 감안하여, 전국 14개 공항에 확대 구축
- (빈손여행 서비스) 김포-제주 시범사업('21.7~) 운영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고(91% 만족) 서비스 확대요구에 따라 짐배송 서비스 확대
 - * 5개 공항(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양양) 양방향서비스, 전 항공사 시행
- (항공금융기구) 항공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금융리스크 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해 항공조합 설립·운영방안 마련
- (MRO 해외물량 확보) 지자체·공항공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MRO 지원협의회(4회) 개최 등을 통해 이스라엘 IAI, 미국 아틀라스 항공·P&W, 영국 WSA 등 글로벌 해외 정비물량을 국내에 유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제선 조기 정상화, 항공조합 설립방안 마련 등 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표성 있는 과제 선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항공산업 고용률 유지 등 난이도 높은 과제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국제선 조기 정상화 관련 항공·여행업계 설명회, 비대면 탑승수속 쟁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지속 협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국제선 여객 코로나19 이전 57.5% 수준으로 회복, 비접촉 방식 탑승수속 시스템 구축
3-3. 정책만족도	9.2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경쟁력 강화) 국내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우리나라로 이동(선박),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로 환적하여 수출토록 규제 개선하여 비용절감

* '25년 200조원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신규 진입하였으며, 수송기간을 70일에서 3일 내외로 단축하고, 1회당 물류비용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감

-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던 헬기, 부품 등 국산화를 위해 인증 지원, 국내 항공사·수요기관 보급 등 시장 확대·외화절감

▶ 수입 대비 저렴한 국산품 보급으로 국내 항공사에서 수입대체 사용 기대

* 컵홀더 가격(1개) : 수입품(약 100\$), 국산(약 28\$)

* 항공기 1대(B747 기준) 약 360개 컵홀더 장착(소모품) 사용,

* 국내 대형항공사 기준 : 약 3,500개/년 수요 예상(3억원/년 예산 절감 기대)

- 수입 의존 헬기의 국산화·안전성 인증을 통해 부품에 대한 핵심 기술 국산화에도 기여하여 소방기관(경남소방, 중앙119)에 보급 지원

<< 국산·외산 헬기 비교 >>

▶ (가격) 국산 수리온 가격은 약 250억원 정도로 외국산 헬기와 비슷한 편임(러시아 産 KA-32 : 250~260억, 유럽産 AW189 : 330억)

▶ (운영비) 정비·부품보급 등 연간 운영비는 외국산 대비 수리온이 저렴(국산 5.8억, 외산 10.2억)하고 신속한 기술 지원도 유리

- (글로벌 리더십 강화) 금번 이사국 선거 이사국 8연임을 통해 그간 유지해온 우리의 국제항공사회 內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

- 또한 파트상향(III → II)진출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향후 파트상향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중대형 항공기의 기체·엔진 제작은 기술장벽이 상당하여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제작산업을 육성 중이나, 업계 체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통적 항공기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UAM 시장 전환이 예상되므로 수직이착륙·전기동력 등 UAM에 특화된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 국내 UAM 기체 제작시장을 지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B	· 항공제품 상용화,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 ICAO 이사국 연임 등 정량지표 다수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최근 항공여건에 따라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목표 수립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제작산업 지원을 위한 업계 등 의견수렴, 신기술 출현 대응을 위한 안전성 인증기준 마련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드론 안전성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신설, ICAO 이사국 8연임 달성
3-3. 정책만족도	8.8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철도 R&D 브랜드화) 학계·산업계 의견 수렴 및 R&D 브랜드화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 R&D 중장기 계획 수립(`22.3)
- (하이퍼튜브 TB 선정) 전북 새만금을 TB 부지로 최종 선정(`22.8)하고, `22년 9월 3차 예타 대상 신청(국토부→과기부)
- (국산 신호시스템 확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전라선 시범사업 완료
 - 국산 열차제어시스템인 KTCS-2로 국가철도망 표준화 추진하여 철도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11,459명*)
 - *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전기장비) 반영(5.3명/10억원)
- (관제시스템 첨단화·고도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시스템 분야 ISMP(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마련(`22.9)
- (철도표준 국제화) 기술환경 적시성, 국제표준환경 대응 등 고려한 철도표준의 선진화를 통해 철도안전성과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 철도표준규격 92종 정비를 통한 개정(91종) 및 확인(1종) 고시(`22.9), 운영사 제안표준 4종 검토를 통한 제정(1종) 및 개정(3종) 고시(`22.1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철도클러스터, 하이퍼튜브 개발사업은 예타 신청 등 추진 초기단계로서, 가시적 성과가 다소 부족해 국민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예타통과 등 가시적 성과 발생 시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성과관리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노후차량·시설 개선, R&D 실적, 철도산업 클러스터 관련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B	· 철도 R&D 실적 건수 등 적극적 목표 수립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7%	· 철도시설개량사업 추진 실적 관련 일부 추진 절차 중 다소 미흡한 부분 존재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하이퍼튜브 유관기관 설명회, 철도안전감독관 정책포럼, 친환경 수소 열차 개발을 위한 실무 회의 추진 등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KTCS-2 시범사업으로 신호장치 국산화, 해외 진출 발판 마련 및 일자리 창출
3-3. 정책만족도	9.2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 삶의 질 향상) 토지의 실제 현황과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한 34만 필지를 새로이 측량·정리함으로써 토지가치 증대 및 재산권 보호
- (민간산업 활성화) 책임수행기관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수행주체(LX, 민간)별 합리적인 업무분담비율 마련
 - LX와 민간의 경쟁체제에서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수행토록 전환하여 민간 참여율은 약 10배 상승, 기술자 수는 약 20배 상승
- (사업 다각화) 목표기간('30년) 내 사업완수를 위해 집단불부합지 위주 사업 추진방식에서 소규모(10필지 미만) 불부합지로 확대
- (협업추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화 사업 등 협업을 확대하는 관리계획을 수립(5.10.)하고 확산 추진
 - * ('18~'20년) 84개 지구 → ('21년) 168개 지구 → ('22년) 240개 지구
- (제도개선) 지적재조사특별법 하위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절차 및 규제 완화, 드론활용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진
- (국유재산 확보)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거나 경계가 잘못 등록된 토지를 정비·신규 등록함으로써 국유재산(약340억) 확보 기여
 - * 신규등록 대상지 3,324필지(약 209.9만㎡) 발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적재조사 민간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민관합동회의 등 노력했으며, 향후 신속한 입법을 통해 실질적 민간참여 확대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법체계 정비 및 공백보완) 민간참여 확대, 사업추진 방식 다각화 등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입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시 민간업체 참여율 제고, 지자체 협력 등 지적분야 혁신 추진을 위한 과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B	·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민간업체 참여율 등 지표 목표치 도전적 수치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지적재조사 업무공정비율 개선을 위한 간담회, 재조사사업 참여 업체 대사 워크숍 추진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정보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 강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해 토지정형화율 상승
3-3. 정책만족도	9.3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요 대책)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마련(7.20)
 - 소득별·생애주기별 수요분석을 통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 마련(12.29)
- (통합공공임대 공급) 유형통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범사업 권역 선정(3.3), 통합공공임대 2곳 최초 공급(과천 지식, 남양주별내)
 - 또한, 기존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재공급 예정 물량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8.18)
- (도심 공급) 역세권 등 생활 편의성이 높은 기존 도시에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를 신축 매입약정 위주로 확대(2.1만→2.3만)
 -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매입임대 공급(2천호 공모) 및 지자체, 대학 등과 협업해 입주자를 지원하는 특화형 전세임대 도입
- (맞춤형 주거 지원) 청년이 주거와 일자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직주근접형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급(‘22년 7,217호 준공)
 - 아울러, 고령자주택의 입주 자격·지자체 재량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고령자 특화주택 확대(1.2→1.5천호) 등으로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생활 SOC, 사회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으로 확장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마련, 고령친화주택,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대표성 있는 과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테마형매입임대 공급목표치 상향, 공공임대주택 품질향상 등 난이도 높은 과제로 구성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8.7%	·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주거취약계층 민가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민임 법령 개정 등 일부 지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임대주택 현장방문, 입주자 간담회 개최, 테마주택 공모계획 마련 및 지자체·대학 수요조사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추진, 공공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 수립
3-3. 정책만족도	9.7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취약계층 지원) '22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중위소득 45→46%)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21년 95% → '22년 100%)
 - 지자체·공공기관(LH) 등과 협업하여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선제 발굴하여 공공임대로 이주 지원, 이사비·보증금 등도 지원(7천가구)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청년 월세 지원('22.11월~)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인 공공임대 입주자(전국 LH임대 106.5만호)에게 임대료 1년간 동결 연장
 -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약 1천가구(호당 380만원)에게 경사로, 장애인용 주방가구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주거위기가구 지원) 산불·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 * 경북·강원 산불(3월) 32호, 중부지역 집중호우(8월) 48호, 태풍(9월) 10호 공급 등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에게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955호)
- (노후임대 개선)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 마련('23~'27, '22.11), 노후 영구임대 29만호 대상 세대통합·단일세대 리모델링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거복지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협업 강화,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주거복지 네트워크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긴급지원주택 지원, 주거급여 수급대상 확대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그린리모델링, 주거급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등 도전적인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6%	· 주거상향사업 지자체 협업을 위한 컨설팅 업무 추진 절차 일부 미달성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주거복지센터 간담회, 긴급주거지원 설명회, 긴급주거 신속 지원 등 현장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6.7%	· 청년월세 지원실적 목표치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긴급지원주택 공급,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급여 지원 지급대상 확대
3-3. 정책만족도	10	

Ⅲ-2-①	주거안정 기반 강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A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로드맵) 국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혁신 과제 발굴, 품질·정주환경·공급속도를 아우르는 추진전략 마련(8.16)
 - 청년·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로드맵 구체화 및 자금 지원, 조기 사전청약 실시 등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수립(10.26)
- (분양가상한제)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는 등의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6.21 → 7.15 시행)
- (재건축)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사업 위축,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9.29) 하고,
 - 높아진 주거환경 수준 등을 고려,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마련(12.8)
- (규제지역)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3차례 규제지역 조정(7.5, 9.26, 11.14), 서울 및 연접지역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
- (중도금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분양가 기준을 9억원 →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10.27)
- (처분조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6개월 → 2년으로 완화(10.27)
-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수분양자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양도 등 이전까지 준수토록 개선(6.21)
- (주택조합) 표준구역서를 포함한 해설서를 마련·배포(3.31)하고, 쏙 조합(약 599개)에 대한 서면·현장 조사 실시(6.7~9.3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향후 5년간 270만호, 연간 50여만호 공급(인·허가 기준) 계획으로 민간 활력 제고 및 제도 조기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청년 주거지원 계획 수립, 규제지역 재검토 등 대표성 있는 지표 선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국민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최초로 민간위원을 포함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구성 등 도전적 과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민관합동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개최, 청년정책 위원단 의견수렴 등 현장중심 정책수립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분양가 상한제 조정으로 주택공급 여건 개선, 재건축 사업 추진 여건 개선, 공공분양 공급유형 다변화
3-3. 정책만족도	9.5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세사기) 임차인이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하는 전세안심 App 개발을 착수하고,
 - 피해자에게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안내, 법률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서울강서, 9.28)
- (전세대출) 금리 인상 여건 속에서 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1.2~2.4%로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 지원한도* 확대
 - * (청년) 0.7억원 → 2억원 (신혼부부) 수도권 2억원 → 3억원 / 지방 1.6억원 → 2억원
- (분쟁위) 제도안내·조정사례·상담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배포(12.30)
- (정보공개) 전·월세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임대차 신고정보 공개확대(지역 : 서울→전국, 주기 : 월→일) 마련·시행(12.30)
- (청약)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이하, 60㎡초과~85㎡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제도 개편(10.26)
- (충간소음) 성능보강 지원, 자율적 갈등해결 촉진, 인센티브 확대 등 충간소음 저감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충간소음 개선방안」 발표(8.18)
-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알 권리 확대,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등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10.24)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효율·친환경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 계류중으로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지원가구당 주거비 경감액, 보증금 보호, 층간소음 저감 및 관리비 절감방안 마련 등 대표성 있는 과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등 시급성이 높고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난이도 높은 과제 포함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6%	· 모듈러주택 인센티브 도입 관련 주택법 개정 일정 다소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전세사기·층간소음·관리비 관련 간담회 개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 현장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으로 서민 주거비 경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 기여
3-3. 정책만족도	9.8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존사업 조기화, 신규택지 발굴, 도심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로드맵(270만호)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추진기반 마련
 - 적극적인 소통으로 첨예한 대립을 해결*하여 기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콤팩트시티·민간도심사업 등 新모델 도입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 * 기피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갈등, 신규택지 지구지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대립 등
 -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주민 생계지원, 사업비 융자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규제, 소규모정비 층수제한 및 조합원 지위 양도규제 등
- (3기 신도시 등) 청년주택 공급, 임대주택 평형 확대(15평→17평) 등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청년주택 사전청약 공급계획*도 수립
 - * '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 1.1만호 공급계획, '22년 말 고덕강일 등 약 3천호 공급
- (신규택지 발굴) 서울 5호선 연장 등의 광역교통 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 콤팩트시티 모델을 적용한 김포한강2지구(4.6만호 규모) 발표
- (도심복합사업) 공공사업은 현금청산제 개선, 호응이 낮은 후보지 철회 등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도심복합사업도 도입
- (소규모 정비) 층수제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을 신규 선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택공급 효과의 가시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부지조성 착공, 도심복합사업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의 신속한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청년원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 신규택지지구 발굴을 위한 공공택지 조사체계 확립 등 대표성 있는 과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공공택지 후보지 조사시스템 등 신규과제 다수 발굴,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영세업자간 이해관계 대립 등이 존재해 난이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택지지구 관련 이해관계자 면담, 공청회 개최, 소규모정비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 추진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3기 신도시 공공임대 입주율 제고를 위한 중형임대 전환,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기반 마련
3-3. 정책만족도	9.7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공시價 시세반영률 지역·유형별 균형 개선, 현장조사·외부점검 확대 등 신뢰제고 및 '22년 공시가격 공시('22.4)

- '22년 공시 변동에 따른 유관제도 영향 분석*을 통해 국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22.3)하고,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마련('22.11)

* '22년 공시 부담완화방안 관계부처 회의(국토, 기재, 행안, 복지부 등)(3.18)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물등록·광고
- 거래까지 시장교란 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 3,611개 광고 조사(556건 적발), 고가주택·외국인투기 등 11,203건 기획조사(4,874건 적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로 편법증여·기획부동산(지분 쪼개기 등) 행태에 선제 대응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시장관리 강화

○ (개발사업 투명성 강화) 토지보상 시 사업시행자 등 업무종사자, 토지관련법·전매금지 위반자 대토보상 제외(토지보상법 개정, 22.2)

- 벌폐입찰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청약 IP당 참여횟수 제한('22.1), 1사 1필지제 도입('22.10), 당첨업체(101개)점검('22.1~8) 및 근절대책 발표(9.26)

- 특히, 투기사태로 저하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LH 혁신계획* 마련('22.12)

*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등 불공정·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조직·인사 효율화 및 기능·업무 조정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소비자 보호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중개광고 모니터링 건수, 실거래조사 건수 등 다수 정량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실거래 조사,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한 COD 개선 등 지표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7%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 절차 일부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LH 혁신방안 마련
3-1. 성과지표 달성도	98.8%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 절차 일부 지연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공시가격 수정계획으로 주택·토지 소유자 부담 완화, 외국인 주택투기조사, 벌떼입찰 특별점검 등 거래질서 확립
3-3. 정책만족도	9.0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산업 육성 지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부동산 공공 데이터 개방전략('22~'24) 수립('22.9) 및 공공데이터(실거래가) 추가 공개
 -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중기부·행안부) 개최, 사무공간 무상 제공 등 지원
- (산업 경쟁력 강화) 리츠·중개·감정평가·개발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리츠) 투자유형 다양화, 상장리츠 활성화 등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1.13,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7.26)
 - 자산관리회사 경영건전성 유지기준·평가방법 구체화 등 '부동산투자회사 감독규정' 개정(9.13) 및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관리 규정' 개정안 마련(12.22)
 - (중개업) 서비스 다양화 및 신기술 활용 등 시장대응을 위한 '교육지침' 개정(7.11), 중개법인 최저자본금 삭제, 대형화 등 추진(10.31)
 - (감정평가업) '타당성조사 회부기준' 마련(5.18)을 통해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의 신뢰성·공정성 확보
 - (개발업) 지속 성장을 위한 개발인력 자질향상, 전문성을 강화 등 연수교육 도입(8.11) 및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 확대
- (신·구 산업 협력·상생) 신·구산업 간 갈등해소 및 융합서비스 발굴 등 상생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22.2) 및 컨퍼런스 개최(11.11)
 - * 산업동향 및 기술변화 분석, 신·구산업간 협력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1~10월, 총 5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개협회 법정화, 의무가입 등 발의법안('22.10)에 따른 갈등관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 개방, 상장리츠 활성화 등 산업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적절한 지표 선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신설·운영, 상장리츠 자산총계 확대 등 도전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업계 설문조사, 중개업 구조개선 협의체 운영, 리츠 민관합동 협의 구성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청취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아파트 단지 식별정보, 공장·창고 실거래가 정보 개방 확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기준을 신설해 공정성 강화
3-3. 정책만족도	8.9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구별 이행현황 등을 전수조사하여 집중관리지구 37곳 선정 및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22.10)
 - *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교통대책 마련(집중관리지구) 및 중장기 시설확충 수요 발굴
-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광역교통 특별대책 발표('22.10) 및 35개 지구 보완대책 등 마련 추진(지구별 TF, 주민간담회, 권역별 협의체 등 진행)
- 용인플랫폼시티 등 신규 개발사업 개선대책 수립(3건) 및 인천검단 등 여건변화에 따른 기존 개선대책 변경(2건)
 - * 용인플랫폼시티('22.11), 공주송선동현('22.12), 광명문화복합단지('22.12) 등
- (광역버스 확대)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이관(66개), 노선 신설(8개) 등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확대(27개 → 101개),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증차 지원 확대(135회/일 → 250회/일 이상)
 - 광역교통 사각지역, 비수도권 지역에 M버스 노선 신설(4개)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저상형 2층 전기버스 확대 도입(20대)
- (알뜰교통카드) 참여지역이 163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이용자도 '21.12월 29.0만명→'22.12월 48.7만명(67.9% ↑)으로 증가
 - * ('22년 신규참여 26개 시군) : 충남(13), 전남(5), 경북(3), 경남(2), 강원(2), 전북(1)
- 전체 이용자 월평균 13,530원(대중교통비의 22.1%) 절감, 저소득층은 추가 마일리지 혜택으로 월평균 15,417원(대중교통비의 27.8%) 절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별 맞춤형 광역교통 보완방안 마련 필요
-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리도록 적극적 홍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알뜰교통카드 확대, 광역교통대책 개선, 입석 해소대책 발표 등 대표성 있는 과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출퇴근 불편을 초래하는 입석버스 해소대책 마련, 지구별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등 난이도 높은 과제 포함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대도시권 범위조정 방안 마련 지표 추진일정 다소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광역교통 개선대책 집중관리주기 지구별 TF 개최, 광역버스 입석 현장점검 등 현장소통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광역교통 개선 특별대책 수립, 광역버스 및 2층 전기버스 운행 확대,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3-3. 정책만족도	9.7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인프라 확충) 신림선 개통('22.5)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광역도로 1개소 및 혼잡도로 2개소 개통
 - * 서울 주요노선(1·2·7·9호선)간 환승이 가능해져 보다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서비스 제공
-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22.10) 및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22.11)
- (신교통수단 활성화) 트램 활성화를 위해 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평가지침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 간선급행버스법 개정*('22.6), 공주~세종 BRT 개발계획 승인('22.10)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 BRT 구축 대상 지역을 대도시권에서 인구 10만 이상 도시(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 등 내용
 - R&D(~'22.12)를 통해 S-BRT 핵심기술 개발·실증을 추진하였으며, 성남 S-BRT 개발계획 승인('22.12) 등으로 BRT 고급화 본격 추진
- (환승체계 혁신) 철도·버스 외 新모빌리티(자율차, UAM 등)까지 환승 가능한 'MaaS Station'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공모시행(12월)
 - 철도·도시철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용자 환승편의의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11월, 「광역교통법」 개정)
 - “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일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10월)보다 2달 늦게 자율주행 BRT 운행개시
 - ※ 30여회 합동점검 등을 통해 기술적 한계극복, 시민 모니터링(246건) 결과 만족도 88.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자율주행BRT 유상 서비스도 연내 개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환승센터 확대, 자율주행 BRT 기반마련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대표성 있는 지표 선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광역·도시철도 관련 지자체 등 다수의 이해 관계 조정이 요구되는 등 난이도 높은 과제 포함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8%	· 자율주행 BRT 상용화 서비스 개시 일정 다소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광역철도 현안점검 회의, 광역 BRT 사업추진 관련 광역교통위 개최, 환승센터 지자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부전 문전교차로 등 혼잡도로 개통으로 통행 시간 단축, 도로망-대중교통 연계 사업 추진방안 마련으로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3-3. 정책만족도	9.6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교통 혼잡 완화와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 (A노선) 쏘울 구간 공사 중, (B노선) 재정: 기본계획 고시('22.3), 민자: RFP 고시('22.7) 등

- 또한, 수도권 GTX 혜택 확대를 위해 A·B·C 연장, D·E·F 신설 사업의 최적노선(안) 도출을 위한 “GTX 확충 기획연구” 착수('22.6)
- 더불어, 진접선('22.3) 및 신분당선 신사~강남('22.5)을 개통하고, 대장-홍대선 제3자 공고('22.9~) 등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

*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22.12),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검토 의뢰('22.9) 등

- (지방 광역철도 확충) 지방 초광역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을 연결하기 위해 선도사업(5개*)을 선정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기준도 대폭 완화('22.12)하고,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광역철도 차량구입비의 국비 부담률 상향*('22.9)

* 기존선 개량형 광역철도 차량구입비의 국비부담률 (현행) 50% → (개선) 70% 지원

- (간선철도 완결성) 운행지역 확대, 용량부족 해소 등을 통한 철도망 완성을 위해 주요 간선망 사업*의 사업절차 적기 이행

* (착공) 강릉~제진, 춘천~속초, 장항선 2단계, (기본계획 고시) 남부내륙, 대구산업, 석문산단, (예타 통과) 수색~광명, 호남선 고속화, 문경~김천 등

- 또한, 고속철도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부선 KTX·SRT 서대구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행선역 연장 운행('22.3)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철도사업은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 지역 민원 등 지연요인 발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 개통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GTX 사업절차 이행, 수도권 광역철도 개통,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 기반마련 등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연내 완료 등 적극적 목표 설정, GTX 조기추진 등 난이도 높은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	· 장항성 2단계 착공, 철도건설법 개정안 발의,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설계 착수 등 일부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GTX 현장방문·주민소통, 광역철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추진 등 주요 간선망 적기 확충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진접선, 신봉단선 개통으로 이동시간 단축, 광역철도 선도사업 사타 완료, 주요 간선철도 기본 계획 수립
3-3. 정책만족도	9.74	

IV-2-①	국가간선도로망 확충과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도로서비스 구현	D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간선기능 강화) 최근 3년간 평균 개통 사업(12건) 대비 2배 이상 개통(25건)하여 이동거리·시간 단축, 지정체 해소, 간선기능 확충
- (국가균형발전) 총 14건의 도로분야 국가균형발전 사업 중 '22년 까지 총 8건 착공, '23년까지 전체 사업 착공 추진
 - * ('22년 성과) 세종~청주 등 고속도로 3개 설계 완료, 장호원~가남 등 국도 3개 착공
-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착수) 경인선(인천-서울)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5.30), 경부선(화성-서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12.27)
- (친환경 충전인프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충전기 90기 신규 설치 및 200kW급 이상 196기 설치 착수, 수소충전기 16기 준공
- (휴게시설 확충) 간선도로망 차원에서 휴게시설 통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휴게소 6개소 및 졸음쉼터 15개소 신규 설치
- (물류·환승시설 확충) 기흥, 청주, 익산IC 인근에 물류시설* 설치 사업 및 복합형·정류장형 환승시설** 확충 추진
 - * 기흥IC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22.6) / 청주·익산 기본계획 수립('22.5) 및 모집 공고
 - ** 하남드림休 사업자 선정('22.7) / 용인역, 서울·서서울TG, 청계TG 타당성검토 추진
- (하이패스 IC) 고속도로 본선·휴게소에서 물류·관광시설 등으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IC* 구축으로 접근성 개선
 - * ('22년 성과) 총 7개소 건설 착수(착공 3, 설계착수 4)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친환경, 노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정책 발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도로망 확충을 위한 고속도로·국도 개통 및 착공, 전기·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도로망 확충 관련 다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과제로, 난이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도로 현장방문, 온오프리안 주민 설명회, 도로 이용만족도 조사 등 정책의견 수렴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도로 이용만족도 향상, 국가 도로망 확충, 고속도로 충전인프라 확충, 비대면 서비스 확대
3-3. 정책만족도	9.74	

IV-2-②	양질의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및 경쟁력 확보	E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철도예매 앱에서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토록 개선하고, 여행·숙박 정보도 제공
 - 또한 네이버 지도앱에서 코레일 열차정보 확인 및 예발권이 가능토록 개선
 - 더불어,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이용객의 짐을 도착역에서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 배송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3년 본사업 확대
- * (4개역) 부산·강릉역(7.15~8.31), 여수엑스포·안동역(7.15~8.21) ☞ 총 21,538건 이용
- (유�휴부지 공익활용 확대)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조성, 창업·취업공간 확대 등 공익적 활용·개발 추진
 - * (어린이집) 여주역, 탄현역, 행신역, (창업취업공간) 안양역, 영등포역, 오송역, 동탄역
- (중장기 로드맵)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건설·운영·안전·산업기술 등 분야별 핵심과제를 담은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고시(‘22.4)
- (국제인증 지원) 지속적인 예산 확대에 이어 지원한도를 향상(50%), ‘22년 11건 등 총 31건의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 (해외수주 지원) 주요 발주국 공무원과의 간담회(4회), 해외철도사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 개최(4회) 등을 통해 유망사업 발굴·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외 수주 등은 민관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수주가 중장기적으로 실현되는 과제로, 지속 노력 및 홍보 강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OSJD 장관회의 개최(‘23.6월)를 계기로 고위급 면담, 협력회의 등 철도 수주 지원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 유휴공간 활용실적, 국제인증 취득지원 등 대표성 있는 과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국제인증 취득교육 이수실적 등 도전적으로 목표치 설정, 철도분야 제조·부품사 등 다수 이해관계자간 조율 필요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8%	·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고시, 한-V4 철도 장관회의 개최 및 MOU 체결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해외진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교통정보 연계를 위한 지자체 협의회 구성 및 설명회 개최
3-1. 성과지표 달성도	98%	· 전환교통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짐배송 서비스 목표치 대비 200% 달성, 해외철도 약 8,500억 규모 수주
3-3. 정책만족도	9.1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교통안전)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대책」('2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2.2),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2~26)」 수립('22.9)
 - (보행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주택가 등), 차량속도 제한(20km/h↓) 및 안전속도 5030 개선(보행사고 위험 낮은 구간, 50→60^{km/h}) 등('22.7)
 - (고령자) 실버존 지정을 위한 대상시설 확대('22.10), 스마트 횡단 보도 단위시설 지원 및 농산어촌 속도 하향 등 추진('22.12)
 - (이륜차) 이륜차 일제조사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 강화, 안전검사제·폐차제 등 도입 논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 시행(8곳, '22.10)
 - (사업용 차량) 불법차량 단속('22.7~11)·집행력 확보(운행단속원 채용, 54명), 소형 화물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자동차안전기준 개정, '22.10)
- (개인형이동수단) 대중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에 공유PM 정보를 통합·개방하기 위한 MOU 체결('22.10)
- (교통약자) 시내·마을·농어촌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법령 개정(안) 완료('22.12) 및 지원 예산 2배 이상 확보
 - (이동편의) 교통약자가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확대(케이블카 등, 교통약자법 개정, '22.1), 광역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신규 국가 R&D 반영
 -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장애인 등의 24시간·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법령 개정(안) 마련('22.12) 및 운영비 지원예산 최초 반영,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서비스 마련을 위한 ISP 착수('22.12)
- (교통환경) 주차로봇 국내 보급을 위해 안전 및 검사기준 마련('22.9) 및 드라이브스루 등 新 시설에 교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검토

□ 개선·보완 사항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국민 안전 대책 적극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 등交通安全 관련 지표 다수 선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관계부처·지자체·시민단체 등 유기적 협조가 중요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交通安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유관기관 의견수렴, 교통약자 간담회·실태조사 추진
3-1. 성과지표 달성도	96%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치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개인형 이동수단 정보 통합·개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3-3. 정책만족도	9.7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실시간 모니터링) IoT 센서 기반으로 노후 교량(287개소)과 비탈면(130개소)에 대한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 (터널원격제어) 터널 내 화재, 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시 차량진입 차단, 환기시설 작동 등 초동대처가 가능토록 원격제어체계 구축
- (도로대장 표준화) 전국 도로대장의 규격을 디지털로 표준화하고 통합 구축 추진 기반 조성
- (지능형 교통체계) 한국형 ITS 홍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확정 및 경부선 주요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C-ITS 인프라 시범구축 추진(815km, '22.12)
- (취약구간 개선)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선형이 불량하여 개선이 필요한 512개소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기본계획 마련('22.12)
- (도로관리) 포장 노면 상태 전수조사(38,000km)를 통해 균열구간을 보수(2,578km)하고, 차선 시인성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
- (과적단속) 적재물 중량 등 화물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화주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안전 강화('22.11, 도로법 개정) 및 적재불량 차량 인식이 가능한 AI기반 단속장비 확대 구축(63개 차로)
- (보행 안전) 마을주민보호구간(60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920개소), 국도변 보도 설치(21개소)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안전사업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도로관리 및 안전 관련 내용을 포괄하고 전국 도로의 관리목표 세부추진계획 등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급속한 도로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예방적 유지관리와 디지털 기반의 선진 도로관리 체계로 전환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교량 IoT 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 ITS 구축, 위험도로 개선 등 다수 정량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비탈면 상시계측, 적재불량 단속장비 구축 등 대폭 상향된 목표치 설정, C-ITS 시범구축 등 신규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ITS 위험도로 등 지자체 설명회 개최, 안심도로 공모전 추진, 지하차도 침수 위험도 평가 등 현장소통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고속·일반국도 구간 사망자 수 감소, 터널 원격 제어체계 구축, 비탈면 상시계측 시스템 구축
3-3. 정책만족도	9.6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속열차 안전대책) KTX 차륜파손사고(‘22.1)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등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22.3)
- (안전관리대책) 차량의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를 통한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제작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15개 세부과제 마련
- (비상시 신속대응방안) 신속대응체계 정립 및 이용객에 대한 신속·정확한 맞춤형 안내방안 마련 등 5개 세부과제 마련
- (트램운영 기반 마련) 오륙도선, 위례선 등 트램노선 개통대비, 트램 기관사 양성기반 마련을 위해 미국 UTA 교통국과 MOU 체결(‘22.5)
- UTA 트램 교육과정에 인력 파견(‘22.5~9)하여 총 6명의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수 인력 양성(교통안전공단 3명, 연구인력 3명)
- (궤도안전 기반 마련) 정밀안전검사 제도, 사고대응체계 보완, 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강화를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안 발의(‘22.10)
- (재난대비 대응역량 제고) 지진·화재 등 예기치 못한 대형재난에 상시 대비하기 위해 분기별 비상대응 훈련 실시(‘22.2~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효과성 확보) 안전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철도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추진동력 확보와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
- 궤도운송법 개정과 성능평가 시행계획 수립 등은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등을 설정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 성과관리 필요
- (실효성 제고) 비상대응 훈련은 우리부·철도운영기관이 참여하나, 훈련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방·경찰 등 참여범위 확대방안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고속열차 안전관리대책, 철도 안전체계 개선 방안 수립 등 국정과제와 연계된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안전체계 개편 등 도전적 과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7.6%	· 형사사범업무시스템 구축,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본사업 시행, 영업열차 차상검측시스템 운영 등 일부지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철도용어 표준화 의견수렴, 트램 도입 관련 지자체 협의, 안전전문인력 관리시스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역사내 AI CCTV 설치를 통한 혼잡도 관리시스템 마련, 철도용어 표준화로 국민불편 해소
3-3. 정책만족도	9.2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KASS 발사성공) 대한민국 항공위성 1호기의 성공적인 발사 및 장관행사·간담회 개최(6.23),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한 홍보관 개관(5.31)
- (항행인프라 확충) 지속 증가하는 항공교통량 수용, 항공기 운항안전 및 미래 항공교통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지속 확충
- (사용료 개선) 제주남단 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규 부과, 부과 체계 개편(단일요금→무계, 거리 등 반영)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분석('22.3~'23.3)
- (지상조업) '20년부터 안전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최근에는 정비 중 안전사고도 발생함에 따라, 지상조업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 (소음대책) 방음·냉방시설 설치 위주의 일률적 지원에서 현금·실비 지원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 제안방식 도입 및 부담금 체계개편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 개최 일정이 일부 지연되었으며, 지상조업 안전관리 및 인력부족 현황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 인력 투입 방안 마련 등 노력하였으나 사고 건수가 목표치에 일부 미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음부담금 개편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항공위성 1호기 발사, 지상안전사고 발생 빈도 감축, 소음관리 정책개선 등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항공위성 성공적 발사, 지상안전사고 5% 감축, 항공 운항 장애시간 1.8배 감축 등 적극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 개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워크숍, 공항소음 피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1. 성과지표 달성도	95%	· 소음대책사업 주민만족도, 지상안전사고 발생 빈도 목표치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A	· KASS 위성발사 성공, 소음대책지역 개편마련 등 항행위성서비스 기반발전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0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항공안전관리 체계 강화) 민관 항공안전데이터 수집, 통합 분석 후 안전정보로 재생산하여 항공사에 활용토록 하여 항공안전장애 감축
 - 정부의 對국적사(11개) 안전관리 결과, 1만 비행당 '19년 7.3건, '20년 4.7건, '21년 1.9건 등 최근 3년 동안 안전지표* 발생률 74% 감소
 - * 활주로 이탈·침범 등 항공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19개 핵심 리스크 지표
 - 제주-부산공항 간 복선화*를 통해 항공로를 분리 운영하여 항공기 간 충돌 등 근접비행 가능성 원천 차단 및 편리성 확보
 - * A320기준 연간 항공기 연료 8,800톤 절감, 2.8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위성 이용 항공로 설계로 지상 시설 설치비 약120억원, 연간 운영비 약 50억 원 비용 절감
 - 위험 전조징후를 구분·정량화하는 위험도예측 알고리즘 실효성 검증(항공안전장애) 및 시범분석·보완을 위한 분석플랫폼 시제품 개발
 - 갑작스런 조종사 건강이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체계적인 항공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활동 의무화 제도 도입(22.1.18)
- (항공레저 안전도 제고) 그간 레저활동자가 선호하는 비행구역을 비행가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불법비행을 일삼던 구역을 비행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민이 편리한 비행환경 조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비행장치별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비행구역 추가 확대를 위한 국방부와 지속적 협의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항공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항공사고 발생률, 주요장애 건수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항공사고 감축 목표치 등을 최근추세치에 비해 적극적 목표치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항공안전 데이터수집 등 제도개산방안 논의, 항공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수습 추진
3-1. 성과지표 달성도	95%	· 운송분야 항공사고 발생률 감축 목표치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항공안전 공유 데이터 확대, 데이터 수집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안전 정보 공개 추진
3-3. 정책만족도	9.1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전제도 내실화) 설계 안전성 검토를 고위험 민간 현장까지 확대,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국토안전원, 광역지자체까지로 부여 추진(8월 발의)
- (현장점검 강화) 현장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전년 대비 1.5배)하고,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공개 및 고강도 불시점검 실시
- (안전문화 확산) 중소 건설현장·지자체 대상 안전컨설팅 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영상 제작 및 웨비나 등 사고사례 공유
- (시공품질 관리강화) 한중콘크리트 건설기준 고도화(8월) 및 레미콘 공장 인증제 도입 추진(11월), 지방청에 품질점검 권한 부여(12월)
- (스마트 안전장비) 설명회(6·7월), 현장 공모·선정(9월) 등을 거쳐 지원 착수(25개소), 장비개선을 위한 R&D 기획과제 착수(9월)
- (지반침하 사고예방) 집중 호우 침수지역 등 긴급 지반탐사 실시(1,373km)
-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의 인력·예산 편성 등 하위규정 마련 및 제도 이해를 위한 안내·홍보 실시(협의회 8회, 설명회, 교육 각 1회)
- (기반시설 관리강화)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제5차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근거 마련(12월), 기반시설 개선예산 인센티브 확대
 - 시설물 점검기준·내진성능평가·취약시설 관리 등 점검체계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요자 중심의 건설안전 정책을 통한 획기적 사고감축 및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건설사고 사망자수, 건설현장 점검실적, 시설물 중대결함 미조치 비율 등 다수 정량지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지원, 건설현장 점검실적 등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8%	· 건설현장 현장점검 실적 추진절차 일부 미흡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건설현장 방문, 학계·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건설안전 규제합리화 방안 등 모색
3-1. 성과지표 달성도	95%	·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치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사고예방 노력 유도, 기반 시설 부실 진단을 하rak 추서로 전환·유지 등 건설 현장 안전 강화
3-3. 정책만족도	9.8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화재기준 강화)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 적용한 창고는 스프링클러 등 별도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4월)
- (해체공사 내실화) 해체계획서 내실화*, 공법·장비 등 변경허가 절차 도입, 지자체 현장점검 의무화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8월)
 - * 허가대상은 전문가(건축사 등)가 해체계획서 직접 작성, 신고대상은 전문가 검토
- (안전센터 확대) 허가부터 해체까지 건축 행정을 수행하는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21: 56개소 → '22: 84개소)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12월)
 - * (기존) 인구 50만명 이상 → (확대) 건축허가면적 및 노후 건축물 비율 상위 30% 이내
- (방치건축 정비) 정비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직권철거 보상비 산정, 정비사업 특례 구체화 등 하위법령 정비 및 시행(3.17)
 - * 「방치건축물정비법」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 후속조치
-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방치건축물 현황 파악*을 완료(9.30)하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11.30)를 거쳐 제3차 정비기본계획 고시(12.23)
 - * 제3차 실태조사('22.5~9) 결과 전국 방치건축물은 총 286곳으로 전년 대비 36곳 감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화재기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대응능력 제고 등 효과가 일부 부족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한 담당자 업무능력 지속 향상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화재기준 강화) 방화구획 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물 화재기준 중 소방청 규정과 일부 상충*되는 사항 개선 필요
 - *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리·높이기준 개선 건의(소방청)
- (해체공사 내실화) 해체공사 전문가 검토 강화로 소형 건축물 해체 시에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범위 조정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화재·붕괴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방화구획, 해체공사 제도선 등 대표성 있는 지표들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건축안전 기준 등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율 등 중요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A	· 생활숙박시설 관리방향 모색을 위한 지자체 워크숍·간담회 개최,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 관련 설명회 개최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개소수 증가, 건축자재 관리 플랫폼 구축, 방치건축물 정비 등을 통해 건축안전 제고 노력
3-3. 정책만족도	9.79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1-②	○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추진	○ '23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수요조사('23.6)
	○ 복합혁신센터 설립	○ 대구·경남 등 복합혁신센터 준공('23.6)
I-2-①	○ 공항 환경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친환경 공항건설지침(안)」 마련('23.6)
		○ 「친환경 공항건설지침」 제정('23.9)
I-2-②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23.8)
		○ 기본계획 고시 및 기본설계 발주('23.12)
I-3-③	○ 임시개방 부지 위해성 저감조치 필요	○ 위해성 저감조치 및 모니터링 추진(~'23.12)
II-1-②	○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 및 자동화 추진	○ 대형 공공공사(턴키, 1천억 이상) 건설 전과정 BIM의무화('23.4)
II-1-⑦	○ 민간에서 고정밀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공간정보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운영('23.12)
II-2-③	○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23.1)
		○ 자동차검사역량평가 제도 법적 근거 마련(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22.10)
II-2-⑤	○ 수직이착륙·전기동력 등 UAM에 특화된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 국내 UAM 기체 제작시장을 지원	○ UAM 인증기준 마련('23.12)
II-2-⑥	○ 간담회 개최, 홍보 등을 통해 정책 추진 체감도 제고와 지속적인 성과 관리 필요	○ 클러스터 입주기업 간담회('23.7)
		○ 공공예타 신청('23.9)
II-2-⑦	○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 본예타 착수('23.3)
II-2-⑦	○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지적재조사측량 업무분담비율 조정을 위한 시행령 및 규정개정('23.12)
IV-1-②	○ 자율주행 BRT 운행	○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내 유상서비스 개시(~'23.12)
IV-2-②	○ 해외 수주 등은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실현되는 과제로, 실제 성과와 연계되도록 지속적인 수주 활동을 추진할 필요	○ OSJD 장관회의 개최('23.6월)를 계기로 고위급 면담, 협력회의 등 철도 수주 지원 추진
V-1-②	○ 도로안전 강화 관련 법적 근거 및 종합계획 마련	○ 도로 안전 강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안 발의('23.12)
V-3-②	○ 방화구획 시공관리 강화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3.12)
	○ 발코니 소방관 진입창 설치 개선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23.7)
	○ 소형건축물 등 해체공사 합리화	○ 연구용역을 통해 해체공사 합리화 방안 마련('23.12)

[붙임] 2022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정부조직법 제42조)

□ 핵심기능

국토·도시	■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정책, 하천관리계획 등 수립·추진 ■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도시공원 등 추진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주택·토지	■ 주택공급 확대 등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 ■ 내집마련 기회 확대 지원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 ■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 조성
건설	■ 건설산업 발전·육성 방안 마련 및 건설일자리 개선대책 추진 ■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 추진 및 글로벌 인프라협력외교 총괄 ■ 건설현장 및 기반시설물 안전대책 수립·추진
교통·물류	■ 종합교통체계, 광역교통체계, 통합연계형 물류체계 구축 ■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및 교통사고 감축 ■ 자동차 등록·안전관리·운행 등 자동차 정책 수립·추진
항공	■ 항공 관련 제도, 공항 개발, 항공물류 및 항공보안 등 총괄 ■ 항공협정 체결 및 운수권 배분, 항공자유화 ■ 항공사고예방 정책, 공항 소음대책·환경관리 총괄
도로	■ 빠르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국토경쟁력 강화 ■ 안전하고 과학적인 도로관리 등 국가 간선기능 유지 ■ ITS 등 첨단운영체계를 통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공
철도	■ 철도산업발전 지원 및 국가철도망 구축 ■ 일반·고속·광역·도시철도 제도운용 및 확충, 유지보수 ■ 철도사업제도 운용 및 철도물류체계 개선, 철도산업기술 육성

국토교통부 조직도

기 구	기준정원
○ 본부 : 2차관 5실 3국 19관 86과 · 9팀 ○ 소속 : 1차 15개, 2차 41개, 3차 31개 - 책임운영기관 2개(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 총 4,137명 - 본부 : 1,037명(한시정원 37명 포함) - 소속 : 3,100명(책임운영기관 469명 포함)

□ 본 부



- ※ 한시조직(1개)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23.3.31)
- ※ 자율기구(2개) : 주택공급기획과(~23.3.1), 광역급행철도추진단(~23.3.1)
- ※ 총액인건비제팀 - 본부(9개) : 디지털소통팀(~'23.9.30.), 스마트도시팀(~23.1.31), 공정건설추진팀(~'23.5.31), ICAO팀(~'23.5.31.), 디지털도로팀(~'23.5.31.),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23.9.30), 주택임대차지원팀(~'23.9.30), 도심항공정책팀(~'22.12.31), 공항건설팀(~'25.6.30)
- 지방청(5개)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청 교통안전팀(~'24.12.31.)
- ※ 긴급대응반(1개) : 코로나19생활물류긴급대응반('20.11.13~'22.12.31)
- ※ 별도조직(7개) : 공공주택본부(~'23.9), 도시재생사업기획단(~'23.4),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23.12)지적재조사기획단(~'24.6), 혁신도시발전추진단(~'23.2),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24.6),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23.2)

□ 소속기관 (87개 : 1차 15개, 2차 41개, 3차 31개)



1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3차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2) :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 조성

비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략목표

I.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III.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성과목표

1. (Compact)
지역주도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1.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新산업을
육성한다.

1. 민생안정 및
주거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1.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을 달성한다.

2. (Network)
지역 중심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한다.

2. 기존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2. 도심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2. 교통망을
확충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2. 첨단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간교통망을
조성한다.

3.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 분야를
혁신한다.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3. 건설 현장
위험요인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1)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성과지표

수도권 인구집중도

□ 성과지표 개요

< 수도권 인구집중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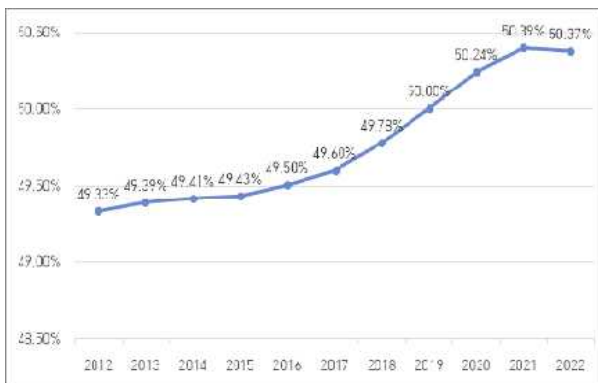
- 개념 : 수도권 인구집중도
-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 조사대상 :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제외)
- 조사방법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 측정산식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민등록인구 / 전국 주민등록인구

□ '22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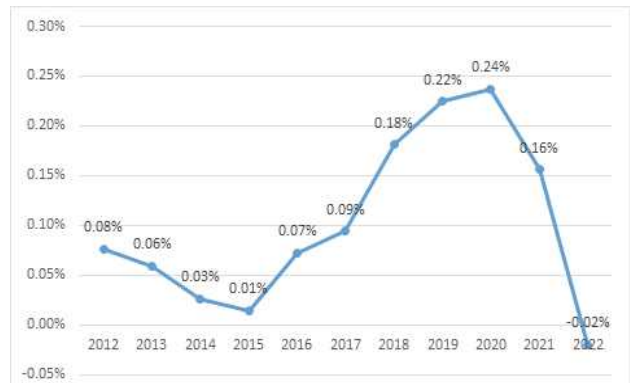
○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19년 50%를 초과하였으며 '22년에도 인구 집중은 지속(50.37%)되었습니다.

- 한편, 지난해에는 그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 등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도 증가율은 6년만에 감소*하였습니다.

* '19년 0.22% → '20년 0.24% → '21년 0.16% → '22년 -0.02% (통계청, '22.12)



<수도권 인구 집중도 추이>



<수도권 인구 집중도 증가율 추이>

□ 성과분석

-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가 출범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을 조성하고 서로 연계(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첫째, 권역별 메가시티에 기업이 주도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지방 대도시 도심에 복합 공간(산업·주거·문화 등)인 도심융합특구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안(김정재, 10.24)을 발의하고 3년간 난항이었던 울산에 지자체·국회의원 등을 설득하여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선정(12.19)하여 5곳* 모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선정 완료
 - 지방대학의 일자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캠퍼스혁신파크의 경우 기존사업(5곳)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량있는 지방대학(전북대, 창원대)을 신규 선정(22.6월) 하였습니다.
 - * (1차사업) 산학연 혁신허브 착공('22.1, 강원대·한양대ERICA, '22.8, 한남대)
(2차사업) 경북대·전남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22.12.26)
- 둘째,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강소도시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거점사업에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강소도시의 산업기반 확충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방안 마련(10.31), 노후산업단지 대개조 신규사업 5곳 선정(4.26), 탄소중립 및 혁신성장 산단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시범산단을 지정(새만금, 대구울하)하였습니다.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교통·산업·주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대상지 3곳을 선정(12.9)하였습니다.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근거 마련 행복도시법 개정(6.10)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테크밸리 8차 분양 완료(11.2)하였으며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승인(11.23), 국회세종 의사당 건립 등을 반영한 행복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추진('21.12~23.2) 중에 있습니다.
- * (기존) 9개 시군(258만명, 3,597km²) → (확대) 22개 시군(486만명, 12,193km²)
- 새만금의 첫 도시로 조성 중인 수변도시를 교육·의료 등 신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6.14) 및 실행 계획 용역에 착수(7.28)하였으며, 새만금의 물류·교통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도로 1단계를 준공(12.28)하였습니다.
- 혁신도시는 지역대학·공공기관 자원을 활용한 혁신융합캠퍼스를 구축*하여 청년인재를 유치하고 클러스터 분양률이 낮은 충북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8.22)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 한국해양대를 "해양 신산업 융합캠퍼스"로 선정(부산 6월), 동신대를 "에너지클러스터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광주·전남 9월)
- 셋째, 낙후지역의 문화, 주거, 교통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에 “생활인프라+주거+일자리”를 결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신규 인구유입을 위한 압축적 생활거점을 조성*(’22년 10곳)하여 우리부 및 타부처의 생활 인프라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복합센터 등 기반시설(HW)과 서비스(SW)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을 조성하고 서로 연계(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2)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성과지표

①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중 국토교통부 소관 업종의 취업자 수
(소분류 기준 : 건물건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등 22개 업종)
- 조사기관 : 통계청
- 조사대상 : 전국 231,120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방법 : 면접조사 방식
- 측정산식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자료 중
국토교통 소관 산업(건물건설업, 육상여객 운송업 등 표준산업분류 중
22개 소분류 업종)의 총 취업자 수를 합산

□ '22년 측정결과

- 건설, 운수, 부동산 등 국토교통 소관분야의 '22년 4월 기준
취업자수는 445.6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5.3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21년 비대면 경제 성장 등으로 취업자수 6.7%p 증가에 이어, '22년
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3.5%p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국토교통 소관분야 취업자 수(단위: 천명) >



□ 성과분석

-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맞춰 8대 혁신성장 동력*을 선정하여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으로 자율주행과 드론, 스마트 시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드론·UAM,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디지털엔지니어링, 건축BIM, 그린리모델링

- 이에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에 따른 고용창출 및 창업공간·교육 훈련 제공 등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18년부터 '22년 8월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약 12만명, 전체목표 比 113%)하였습니다.
- 소관 업종별로, 건설업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조건에서도 전년대비 3.2만명이 증가하였고, 운수·창고업은 코로나 19 장기화의 산업 충격에서 벗어나 비대면 업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8.8만명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물류산업의 채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물류기업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가 채용기업 정보 획득, 채용희망 기업과 구직자간 연결 계기를 마련하고,

* [행사개요] (기간) '22.9.19~10.7(1차), 10.24~11.11(2차) / 온라인
(주요행사) 채용설명회 3.8천명, 채용특강 12.9천명, 홈페이지 가입 1천명 등

* 5년간('19~'23) 600명의 통합 사업용 조종사 양성중(연간 120명 수준)

□ 향후 추진계획

- '23년도 노동시장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물류차질 등에 따른 경제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 '27년 국토교통 분야 취업자 수(지표)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자리·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소관 업종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건설 및 공간정보, 드론, 항공, 자동차 등 전문분야의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고용량도 확대하겠습니다.
 - 자율주행, 드론, 물류 등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및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구축,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취약 계층의 창업 촉진 및 구직자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공간 지원,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지속 추진하고, 국토교통 혁신기술제품 구매 독려,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영 등을 통해 미래 지향적 중소기업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고용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방안의 후속조치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물류 및 항공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우수 인력 수급 및 취약업종의 고용안정망 유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

②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 성과지표 개요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

- **개념** : 수송, 보관 및 창고, 하역, 포장, 물류정보와 일반관리 등 물류서비스 활동에 따른 물류활동의 부가가치(value-added)와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여 물류활동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정도 파악
-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조사대상** : 물류 수송, 보관 및 창고, 하역, 포장, 물류정보 등 국가물류비용
- **조사방법** : 국토교통통계연보(국토교통부), 운수업조사보고서(통계청), 기업경영 분석(한국은행),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한국교통연구원) 등 각종 자료 확인
- **측정산식** : 물류활동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 × 100%

□ '22년 측정결과

- 2022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2025년에 산출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2019년 기준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물류 부가가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3년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약 5월에 발표(2022년도에는 2019년도 실적 발표)

- 2019년도 물류활동 부가가치는 112,409십억원, 국내총생산(GDP)은 1,924,498십억원으로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5.84로 산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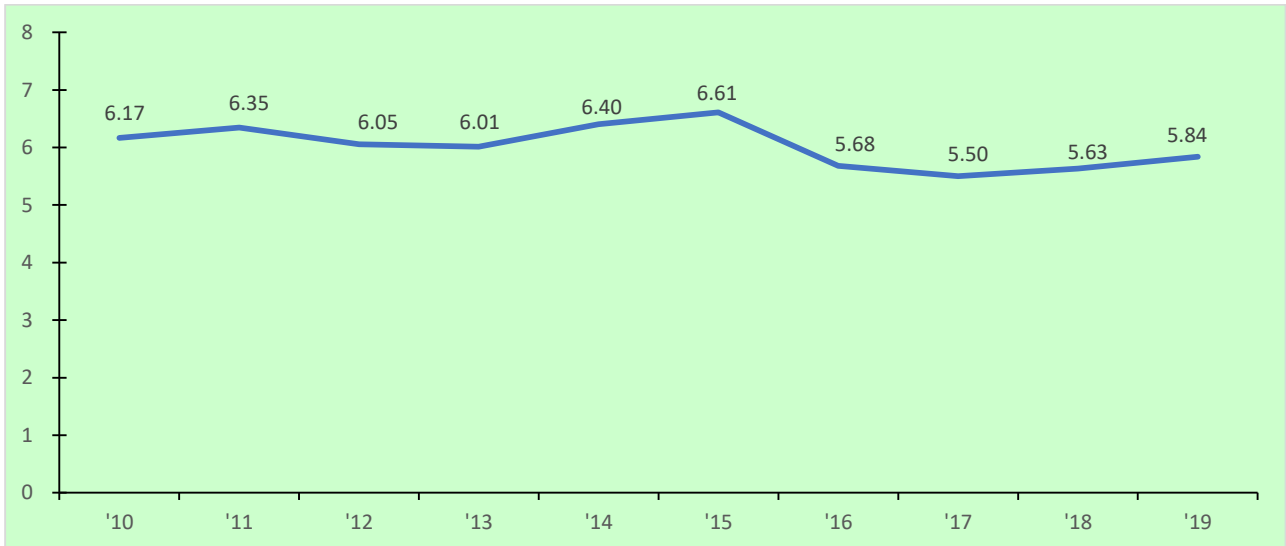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국가물류 활동의 규모적 수준을 국내 총생산(GDP)과 비교·가늠하는 척도로서,

- 물류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0년) '10년 6.17 → '11년 6.35 → '12년 6.05 → '13년 6.03 → '14년 6.42 → '15년 6.62 → '16년 5.75 → '17년 5.55 → '18년 5.63 → '19년 5.84

(GDP디플레이터 기준연도 변경: 2010년 → 2015년)

<연도별 국가물류부가가치 비중>



□ 성과분석

○ '19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5.84%**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2017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 2015년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16년 한진해운 문제의 여파가 완화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20년 물류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만큼 '23년에 산정될 '20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약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물류산업 매출액(조원, 통계청 운수업조사): ('17) 86.0 → ('18) 88.9 → ('19) 91.8 → ('20) 112.6

○ 2021년 7월에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 2.4회('00년) → 53.8회('19년) → 70회('21년)

-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물류산업은 AI·Io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로지스틱스 4.0」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 반면, 우리 물류산업은 디지털 혁신 지체, 물류 인프라 부족, 경유 중심 고탄소 산업구조, 종사자 사회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로 산업 도약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6대 추진전략으로 스마트 물류 공유·연계 인프라, 사람중심 일자리, 지속가능물류,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마련했습니다.
-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을 140조원으로 증대하고 물류 경쟁력지수를 25위에서 10위권으로 높이고, IT 활용지수는 39.6에서 66.1로, 물류 일자리를 97만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은 '21년 7월에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 분야 기본계획으로,
-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물류 분과위원회 운영, 택배·배달·퀵 등 업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 '22년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생활물류서비스정책협의회 논의 및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26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지표('22년 기준)를 7.5%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물류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5년간 목표치 :

'22('19) 6.40 → '23('20) 6.70 → '24('21) 7.00 → '25('22) 7.30 → '26('23) 7.50

- 생활물류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해 「생활물류산업 발전 기본 계획('22~'26)」을 수행하고, 소화물배달업 우수 사업자 인증 등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높아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 물류업체 등에 공공에서 보유한 유휴부지 등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시범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 창고를 국가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 * 로봇, 고속화물기 등 첨단설비 및 IoT, AI 운영·제어시스템을 통해 입고·보관·집하·포장 등 물류 쉼 과정이 효율화·자동화된 시설
- 기존 도시에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현 및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 조화로운 디지털 물류체계를 구현하고, 도시물류 문제 해소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을 선정하여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지급 등 환경친화적인 물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정책 수립 및 성과를 바탕으로 물류산업이 발전하고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지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략목표 3)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성과지표

①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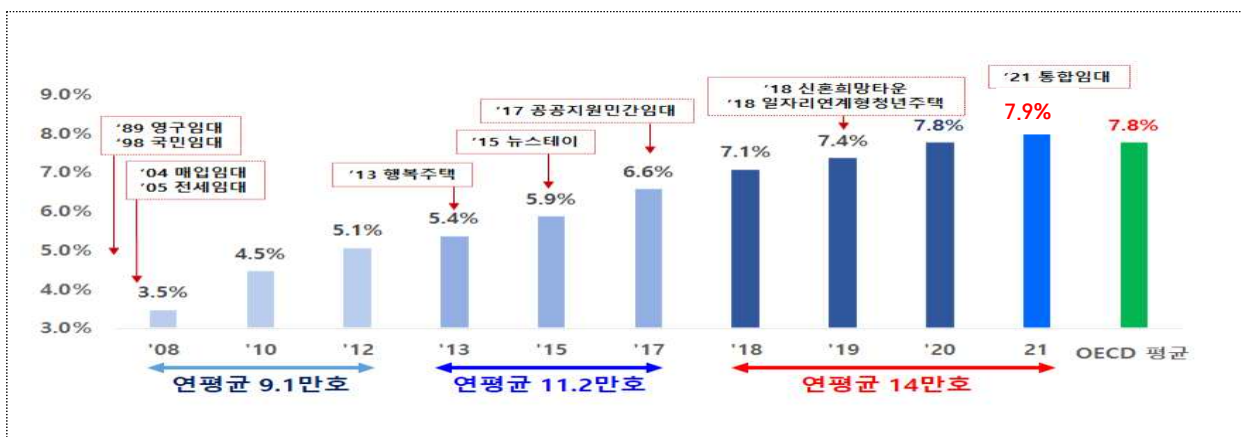
〈 지표명 〉

- 개념 : 장기 공적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표현하는 지표
- 조사기관 : 국토교통부
- 조사대상 : 전국단위의 주택을 표본으로 조사
- 조사방법 : 총 주택수(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임대주택통계)
- 측정산식 : 장기공공임대주택수(B)를 총 주택수(A)로 나눈 값의 평균치를 구하여 계산

* 전년도 공공임대 재고 실적을 집계·분석하여 당해연도 연도말에 공표

□ '22년 측정 결과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20.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 등에 따른 공급 확대 성과로,
- '21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7.9%로 OECD 평균('20년 7.8%)을 상회하였습니다.



□ 성과분석

-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통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 「주거복지로드맵(‘17.10)」, 「주거복지로드맵 2.0(‘20.3)」 등을 마련하여 ‘18년 이후 5년(‘18~’22) 동안 공공임대주택 70만2천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 선호입지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2)」 등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전세형 주택 추가 공급, 상가·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신축 매입약정 확대 등 ‘21년 공공임대 공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연평균(‘18~’21) 약 14만호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 청년층에게는 일자리연계형·기숙사형 등 청년특화주택을 플랫폼으로 학업·취업 등을 연계 지원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월세(월20만원) 등 청년 전용 금융지원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 * 청년 친화적 공유공간(소규모 작업공간, 스튜디오 등) 제공
 -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하고 육아특화 설계 등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양질의 신혼특화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 ‘21년 신혼특화형 국민임대 3곳 최초입주(광주효천, 시흥장현, 남양주별내) 및 신혼희망타운 2곳 최초 입주(위례, 평택)
 - 고령자에게는 사회복지시설(식사·여가서비스 제공)과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자가 가구에 단차 제거 등 안전·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 일반·저소득에게는 다자녀·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히 다자녀가구의 전세 임대 임대료도 완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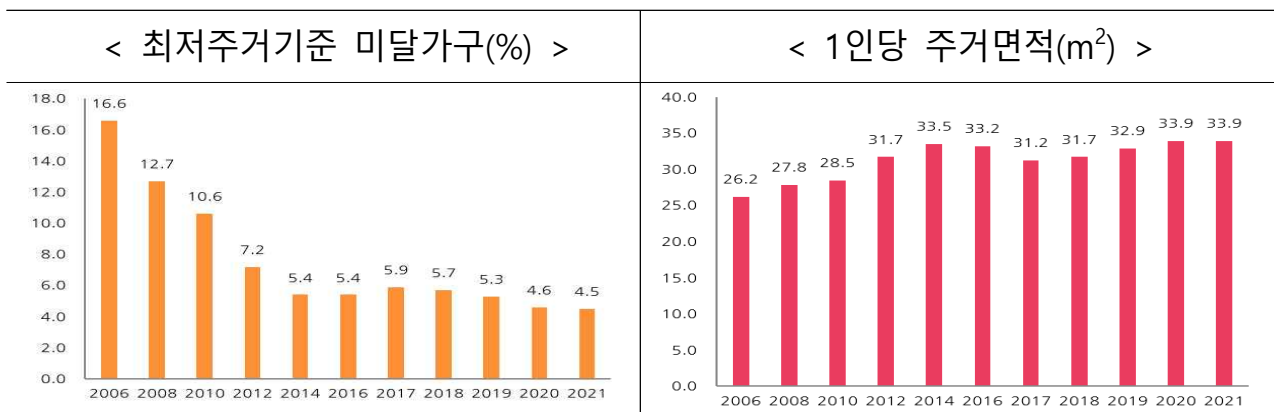
○ 이러한 국토부의 정책 노력이 다음과 같은 실제 서민 주거 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7년 5.9%에서 '21년 4.5%로 장기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 ('17년) 5.9% → ('18년) 5.7% → ('19년) 5.3% → ('20년) 4.6% → ('21년) 4.5%

- 1인당 주거면적 또한 '21년 33.9m²로 '17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17년) 31.2m² → ('18년) 31.7m² → ('19년) 32.9m² → ('20년) 33.9m² → ('21년) 33.9m²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5년간('23~'27)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공공임대 주택은 연 10만호(건설임대 3.5만호, 매입임대 3.5만호, 전세임대 3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필요시 도심 내 취약계층에 즉시 공급가능한 전세임대 등 중심으로 탄력적 공급 검토 → '23년은 전세임대(0.7만호)를 추가하여 10.7만호 공급

- 경기침체,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23~'27, 86%)하고,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 이상 공급하는 등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인구·가구 변화에 대응하여 늘어나는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23~'27, 6만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행복기숙사, 일자리연계형 주택(연 4천호) 등 다양한 특화임대도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그간 공공임대 공급 시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 내용을 직접확인 후 신청하여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공공임대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임대기간·보증금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통합임대 중위 150%로 일원화, 매입임대는 청년·신혼간 칸만이 완화 등 (임대기간) 통합임대는 30년 거주, 매입·전세임대는 청년층 거주기간 확대(6→10년) (보증금) 주거급여 수급청년 보증금 하한선 인하, 매입임대 전세형 유형 도입 등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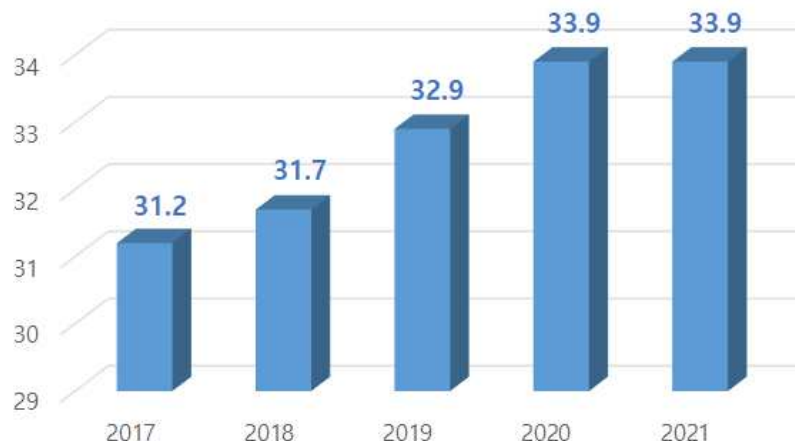
〈 1인당 주거면적 〉

- 개념 : 1인당 주거면적은 물리적 주거밀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국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의 질을 표현하는 지표
-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단위의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약 5.1만호)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와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
- 측정산식 : 개별가구의 주택사용면적(S_i)를 개별가구원 수(n_i)로 나눈 값의 평균치를 구하여 계산

□ '22년 측정결과

-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22.12. 발표),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2020년 조사결과와 동일하였습니다.
- '17년부터 건축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였으며, '17년 이후 1인당 주거면적은 8.6% 상향되었습니다('17년 31.2㎡ → '21년 33.9㎡).

〈 1인당 주거면적 추이 (단위 : ㎡) 〉



□ 성과분석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과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선정하였으며,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22.10.) 등을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 '23년부터 향후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며, 선호도 높은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22.9.)과 안전진단(22.12.)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새 브랜드로 “뉴:홈”을 선정하였으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2,298호 규모로 첫 사전청약을 실시(22.12.)하였습니다.
-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22.11.)을 통해 59㎡이하 공급 규모였던 3,869호를 60~85㎡ 규모로 상향하였습니다.
- * 남양주왕숙 1,351호·인천계양 350호·부천대장 719호·고양창릉1,449호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과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4점 만점)는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 가구원수별 면적과 방의 수, 설비(부엌·화장실·목욕시설) 기준 등에 따라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7년 5.9%, '18년 5.7%, '19년 5.3%, '20년 4.6%로 '21년 4.5%로 지속 감소하였습니다.
- 주택 만족도는 2019년 이후 3.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는 2.96점으로 2020년 2.97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3인 이상 단칸방,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는 0.1%로 극히 드물며, 전체 거주 가구는 1.1%로 2020년 1.6%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270만 주택공급 로드맵 실천 첫 해로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신규 정비구역(4.8만호)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진단기준 개정('23.1.), 재건축이익환수법, 도시정비법 개정('23.上.)

- 도심복합법 제정('23.上.)을 통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시행 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신규 후보지 발굴 및 기존 후보지 지구지정(1만호)을 추진하겠습니다.
-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을 본격 추진하고, 기 발표 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분양은 사전청약 공고('23.7, 12)를 통해 7천호를 조기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10.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에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 사용을 시범 도입하고, 공급 면적 확대와 빌트인 품목 및 마감재 개선 항목 확대, 창의적 디자인 적용 등으로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고령자(무장애 설계 등, 1천호), 청년(일자리 연계, 4천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의료, 복지서비스 등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 주거지원 및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표준매뉴얼)로 취약계층 선제 지원,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15→111곳)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미수급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장애인 가구에 안전손잡이·단차제거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략목표 4)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성과지표

① 철도 연장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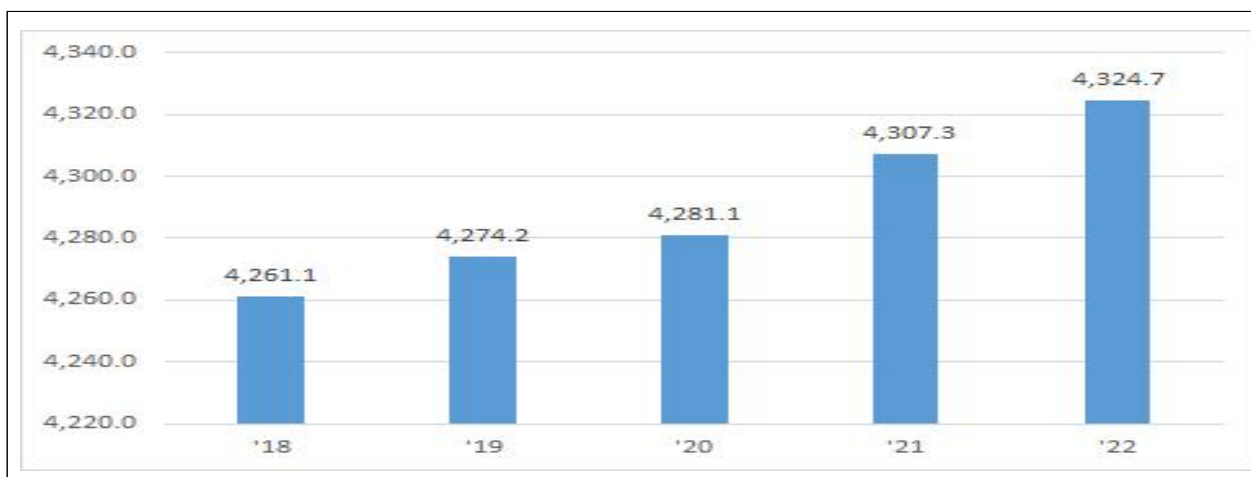
〈 철도 연장 〉

- 개념 :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신규 철도 개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증가하는 연장 현황
- 조사기관 :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기관
- 조사대상 : 전국 철도연장(고속, 일반철도 연장)
- 조사방법 : 내부 통계 자료
- 측정산식 : 전국 철도연장(고속, 일반철도 연장) 합산 * 철도키로 기준

□ '22년 측정결과

- 철도연장 '22년 목표는 개통 예정인 2개 노선(진접선, 신분당선 강남~신사)의 연장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으며,
 - 당초 목표 노선을 모두 개통하여 철도서비스를 적기 확충하였습니다.
- '22년 철도 예상 연장은 4,324.7km이며, '18년 대비 약 1.5% 증가하였습니다.

* 다만 '22년 측정결과는 단순 준공 연장을 포함하였으며 최종 통계 확정 시('23.下) 일부 변동 가능



□ 성과분석

- 철도 연장은 교통 편의 증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수반하는 주요 지표로, 철도 확대를 통한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수도권 광역철도), 지방 메가시티 연결(지방권 광역철도), 주요 도시 연결(일반·고속철도)을 위해 신규·기존 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 (A노선) 소 구간 공사 중, (B노선) 재정: 기본계획 고시('22.3), 민자: RFP 고시('22.7) 등

- 수도권 GTX 혜택 확대를 위해 A·B·C 연장, D·E·F 신설 사업의 최적노선(안) 도출을 위한 “GTX 확충 기획연구”를 착수('22.6) 하였습니다.

- 특히, 진접선('22.3)*, 신분당선 강남~신사('22.5)** 등 2개 사업 개통을 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 (개통 前) 서울역~진접 버스 120분 → (개통 後) 52분 ** (개통 前) 광교~신사 버스 80분 → (개통 後) 42분

- 대장-홍대선 제3자 공고('22.9),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검토 의뢰('22.9),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22.12) 등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 지방 초광역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을 연결하기 위해 선도사업(5개*)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본격 추진하였으며,

*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 동탄~청주공항('22.6), 동남권순환('22.10) 광역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태화강~송정 등 광역철도 사업의 공정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 또한, 광역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기준도 대폭 완화*('22.12)하고,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광역철도 차량구입비의 국비 분담률도 상향**('22.9)하였습니다.

* (현행) 권역별 중심지 40km 이내 → (개선) 권역별 중심지와 반경 거리 기준 삭제

** 기존선 개량형 광역철도 차량구입비의 국비분담률 (현행) 50% → (개선) 70% 지원

- 간선철도 완결성 제고를 위해 운행지역 확대, 용량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망 사업*의 사업절차를 적기 이행하였으며,

* (착공) 강릉~제진, 춘천~속초, 장항선 2단계, (기본계획 고시) 남부내륙, 대구산업, 석문산단 등, (예타 통과) 수색~광명, 호남선 고속화, 문경~김천 등

- 고속철도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부고속선 서대구역을 개통('22.3)하고, 강릉선 KTX-이음도 행신역까지 연장 운행('22.3) 중에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철도망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였음에도, 수백차례의 지역의원, 지자체 면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 조정에 힘써 수용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철도건설 공정을 지연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사업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기 개통하는 등 지속적으로 철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23년에는 대곡소사선(고양~부천), ^{경원선}동두천~연천, ^{경전선}진주~광양 등 3개 사업이 개통 예정이며,

-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고속철도}수색~광명 기본계획 착수,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GTX 연장·신설 및 주요 간선·광역망 확충 등 신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용역도 조기 착수할 계획입니다.

□ 성과지표 개요

〈 도로 연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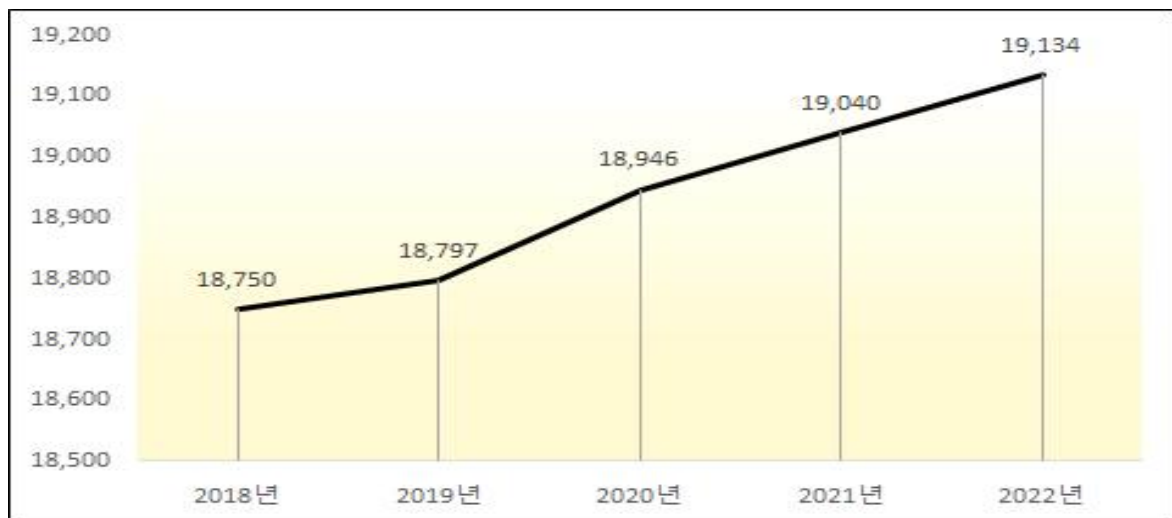
- 개념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선도로망(고속 및 일반국도)의 연장 증가 현황을 표현하는 지표
- 조사기관 : 전국 380여개 도로관리청의 도로 현황 통계 조사
- 조사대상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도로 현황
- 조사방법 : 도로 및 보수현황시스템(RSIS)을 통해 이듬해 1분기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도로 현황 통계 수집
- 측정산식 : 도로관리청별 연장 현황을 합하여 계산

□ '22년 측정결과

- '22년 간선도로(고속·일반 국도) 연장*은 19,134km(잠정)이며, '21년 대비 0.49%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0.50% 증가 추세입니다.

* '22년 측정결과는 '22년 신설구간 준공 연장만 포함하였으며, 선형 개량 등에 따라 연장 증감이 있을 수 있음(최종 결과는 '23.5. 확정)

< 간선도로 연장 추이(단위 : km) >



□ 성과분석

- 최근 5년간 간선도로망을 계속 확충하고, 네트워크 효율화를 통해 지역 생활권 기반의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고속도로) '17년 4,767km → '22년 4,939km, (국도) '18년 13,983km → '22년 약 14,195km

- 고속도로는 대구·광주외곽순환 등 4개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구외곽 순환망을 최종 완성(L=66km)하여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왕복 4차로 신설, L=32.9km, 총사업비 1조 5,710억원, '14.3~'22.3

** (개통효과) 거리단축(37.6→32.9km, ↓4.7km), 시간단축(45→24분, ↓21분), 총 편익 : 1,027억원/年

-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개통(L=9.7km)으로 인근 산업단지로 접근이 용이해져 연간 약 189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 및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교통혼잡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개요) 왕복 4차로 신설, L=9.7km, 총사업비 3,739억원, '15.12~'22.12

- 아울러, 경부선, 경인선 등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포함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을 고시하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 등* 적극 추진 중입니다.

* 경인선(인천-서울) 예타 착수('22.5.), 경부선(화성-서울) 예타 대상 선정('22.12.)

- 일반국도는 죽계~진전1, 정선3교, 주상~한기리 등 21개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 죽계-진전*은 경남 고성~창원 간 교차로 입체화(5개소), 가·감속 차선 설치 등으로 상습적인 지·정체를 해소하고 통영-대전고속도로(고성 IC)와 연결되어 인근 관광지(당항포, 공룡 세계엑스포 등)로 편리하게 접근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개요) 왕복 4차로 신설, L=7.5km, 총사업비 1,130억원, '14.3~'22.5

- 정선3교는 정선읍 내 강으로 가로막혀 단절되어있던 국도를 연결하여 휴가철 ‘정선5일장’, ‘화암동굴’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명소로 이동시 정선읍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개요) 왕복 2차로 신설, L=0.74km, 총사업비 311억원, ‘18.3~’22.6

- 주상-한기리는 경남 거창과 경북 김천 중심을 잇는 구간으로 도시간 이동성을 개선하고, 당초 곡선부와 경사구간이 산재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간을 충분한 도로폭 및 안전한 도로선형 확보로, 주행 안전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2+1차로 신설, L=16.7km, 총사업비 1,813억원, ‘15.4~’22.10

- 아울러, 해상구간을 교량 또는 터널로 연결하는 핵심 국도사업인 남해~여수, 비금~암태, 고창~부안을 발주하여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입니다.

- 또한 일반국도·국지도 신규사업(49건)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설계 착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14개)을 차질 없이 추진* 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 (설계완료) 울산외곽 등 고속도로 3건, (착공) 장호원~가남 등 국도 3건

-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도 사상-해운대 등 9건의 신규 고속도로 민자노선을 발굴하여 제안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적격성조사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고속도로 본선·휴게소에서 물류·관광시설 등으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하이패스 IC를 구축*하여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현황) 19개소 운영중, 24개소 건설중, (’22년 성과) 3개소 착공, 4개소 설계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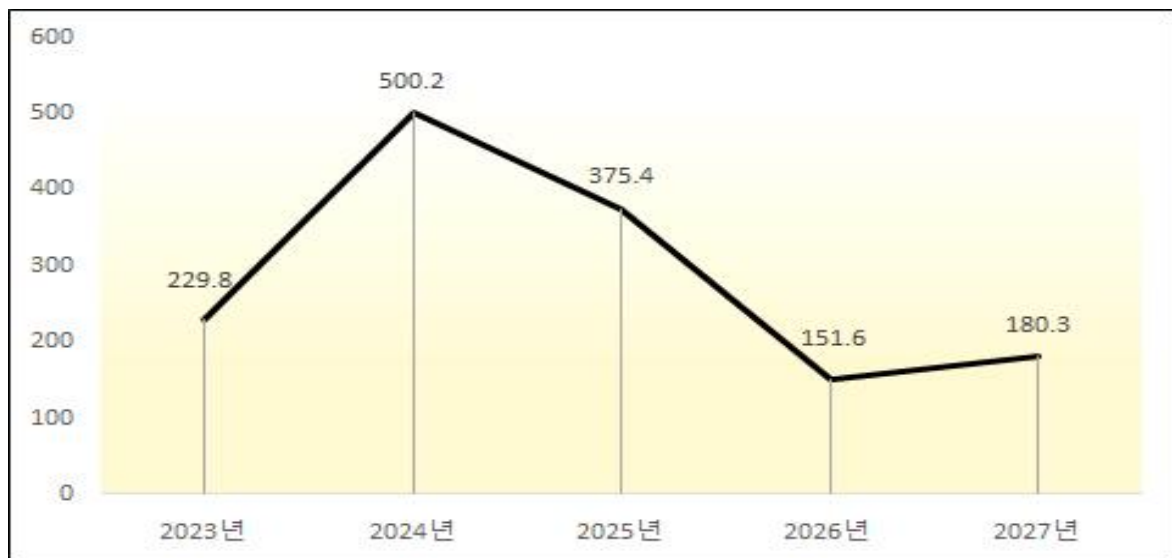
□ 향후 추진계획

○ 여객·화물 이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효율성 강화와 교통 혼잡 해소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하겠습니다.

- 따라서, 도로건설계획 등에 따라 향후 5년간(2023~2027년) 간선도로를 1,437km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재정고속도로) 당진-천안고속도로, 화도-양평고속도로 등 15개 사업(512.9km),
(민자고속도로) 포천-화도고속도로 등 3개 사업(143.2km),
(일반국도) 공도-대덕, 청양-신풍 등 92개 사업(781.2km)

< 향후 5년간 간선도로 추가 확충 계획(단위 : km) >



< 연차별 고속·일반국도 개통계획 >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장(km)	1,437.3	229.8	500.2	375.4	151.6	180.3
재정고속	연장(km)	512.9	38.2	125.6	267.8	70.5	10.8
	사업	15건	당진-천안 (아산-천안) 화도-양평	함양-울산 (창녕-밀양) 파주-포천 안성-구리	함양-울산 (함양-창녕) 포항-영덕 등 7건	강진-광주 양평-이천	문산-도라산
민자고속	연장(km)	143.2	28.7	114.5	-	-	-
	사업	3건	포천-화도	광명-서울 평택-부여	-	-	-
일반국도	연장(km)	781.2	162.9	260.1	107.6	81.1	169.5
	사업	92건	공도-대덕 등 25건	청양-신풍 등 24건	산청우회 등 17건	포항-안동 등 11건	안흥-방림 등 15건

성과지표

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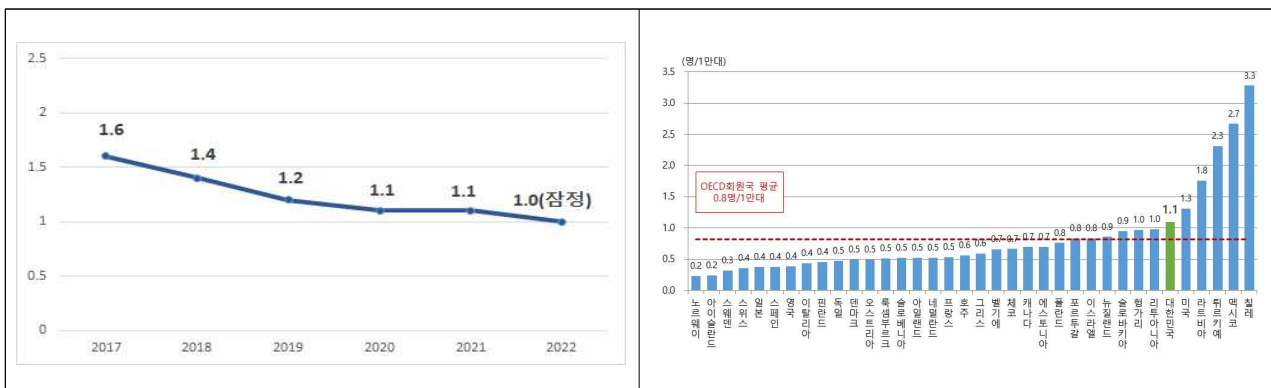
- 개념 :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조사기관 : 경찰청 통계(교통사고) 및 국토부·농림부 등 통계(자동차·농기계)
- 조사대상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 조사방법 : 경찰청 통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확인, 국토부(자동차)·농림부(농기계) 등 통계로 자동차 등록대수 확인
- 측정산식 : ('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자동차 등록대수) × 10,000

□ '22년 측정결과

-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교통 안전 지표로서, OECD 국가의 교통 관련 지표로 활용 중입니다.
- '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명(잠정)으로 예상되며,
 - * '22년 교통사고 확정통계는 '23.3월경 산출 예정
 - '17년 1.6명 → '19년 1.2명 → '21년 1.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 수준(0.8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OECD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년 기준)>



□ 성과분석

- (성과) 국민의 교통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부 주도로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대책」('22.1),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2.2),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2~'26)」을 수립하였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관리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 ('19년) '02년 이후 처음으로 2자리 감축률 달성 / ('22년) 역대 최소 수준의 성과 달성

- (보행자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보행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22.11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2,500명 중 보행사망자 83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3% 차지

- 주택가·상가 등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 차량 제한속도를 20^{km/h} 적용('22.12)하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서행·일시정지 등 의무 부여('22.12)*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 우회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22.12~'23.10), 교통사고 51.3% 감소, 사망자 61.1% 감소

-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속도 5030'을 현장 실정에 맞게 속도 조정(50→60^{km/h})하였으며, 정체 개선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국도 전구간 ITS* 구축계획(~'24)을 수립하여 주요 구간에 ITS를 확대 설치('22년 2,750km, 3,800억원)하였습니다.

- (고령자·어린이 안전) 실버존 지정을 위한 대상시설을 확대*(도로교통법 개정, '22.10)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유형별 표준모델을 마련('22.12)하였습니다.

* (現)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주거·의료·여가) → (改) 모든 노인복지시설(보호기관 등)

- (화물차 안전) 적재불량·불법튜닝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 현장단속을 확대('22.7~'23.11)하고, 3.5t 이하 소형 화물차의 충돌기준 강화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자동차안전기준 개정, '22.10)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륜차 안전)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25만대)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정보를 **현행화**하고, 법규위반(신호위반·인도주행 등) 차량 **단속 강화**(공익제보단 4,163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 시행**(8곳)으로 운전자 및 운행차량에 대한 **종합적 안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택시·법인차) **고령 택시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검사기준 조정·강화 방안*** 및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방지 및 단속·적발에 용이한 **전용번호판 도입 방안****을 마련('22.12)하였습니다.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고시)」 개정('23)

** 도입방안 내용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23)

□ 향후 추진계획

- (목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년(3,081명) 대비 **'27년**(약 1,600명)까지 **50% 수준**으로 줄여 **교통안전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대책 마련) 보행자·고령자 및 이륜차·화물차 등 **취약 분야별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보행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 *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 **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차량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시 **전면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 (고령자·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복지시설 →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이 많은 장소), 국도 **제한속도 하향**(10~20km/h[↓])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23년 60개소)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하고,
 -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 배포 및 어린이 신체특성을 고려한 **통학버스 좌석·안전띠 등 차량 안전기준**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이륜차·사업용 차량) 안전검사 제도,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도입하여 적정 장비·인력을 갖춘 자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 개조 시 종사자격 취소·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업용 차량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교통안전 홍보) 코로나 일상회복 등 교통량·보행량 증가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합동 온·오프라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 * 공중파 방송, 라디오, 신문, 옥외 전광판 및 현장 캠페인, SNS 및 유튜브 등 활용
 - 특히, 보행자 및 화물차·이륜차 등 타겟별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국민참여 프로그램 등 대상별·시기별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지표

②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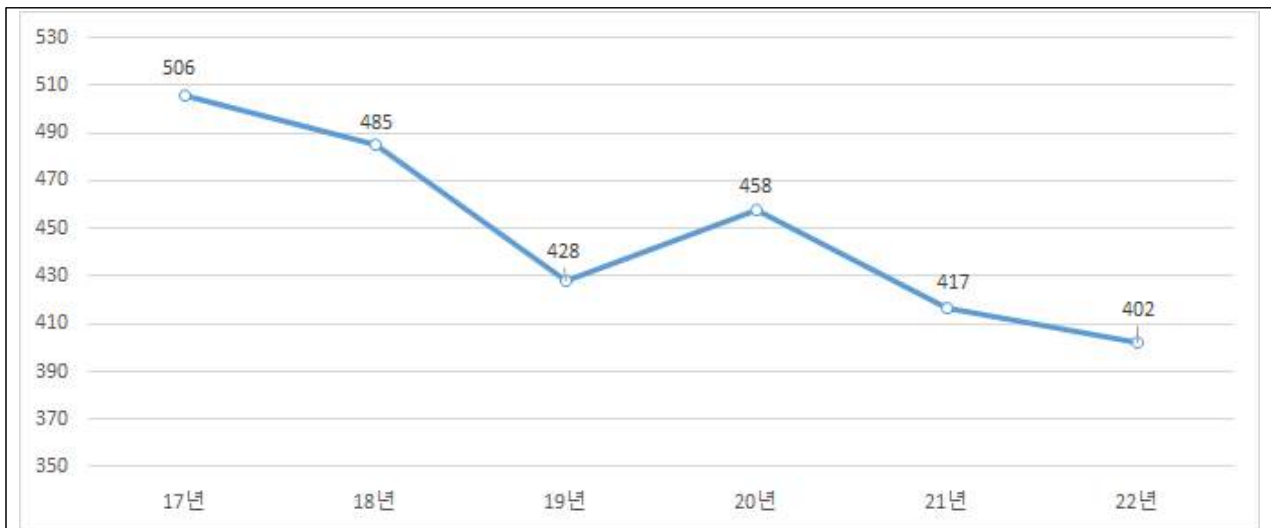
- 개념 : 산업재해 통계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 조사대상 : 산업재해 신고대상 업종 중 건설업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로 사고사망자 수 확인
- 측정산식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 통계자료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 합산

□ '22년 측정결과

- '22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명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17. 506명 → '18. 485명 → '19. 428명 → '20. 458 → '21. 417 → '22. 402.

〈'17년 이후 건설업 사고사망자 추이〉



□ 성과분석

-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기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해빙기·우기·동절기) **정기점검** 및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특별점검** 등을 **연간 상시 실시**
 - 이중,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계 하도급사 명단**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특별점검**(663개소)을 실시하였으며
 - 아울러, 지방청 및 산하·공공기관이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15% 상향*** 실시하였습니다.
- * (점검현황) 21년 19,657개소 → 22년 22,710개소(15.5% ↑)
- 특히, 올해는 **사망사고 등 사고현장**에 대하여 **인력·기간**을 대폭 증가한 **정밀점검**(인력 3~5명, 기간 2일 이상)을 실시(180개소)하였습니다.
- ‘22년 6월 이후 **월별 건설사고의 원인, 유형** 등을 분석하여 유사 현장 및 기관에 **맞춤형 조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 월별 건설사고 분석 및 전파를 통하여 **시기별 위험요소**를 적기에 **발굴**하고, 현장 스스로 **예방체계 역량**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습니다.

* (6월) 건설장비에 의한 깔림 사고 多 ▶ 신호수 배치 리플릿 제작·배포
(7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多 ▶ 외국어 교육자료 확산·배포
(8월) 방학기간 중 학교공사 사고 급증 ▶ 겨울방학 전(11월) 교육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중점사항 전파(웨비나)
(9월) 지자체 발주 공사 사망자 多 (10월) 신공법 사용 현장 사고 多
▶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대상 안전컨설팅 사업 적극 참여 독려, 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 또한 사고 신고 입력·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사고통계분석 기능을 고도화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現) 사고원인 535개 → (改) 15개 중분류, 62개 소분류로 구분

- 한편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사례를 기업 및 현장에 적극 공유하여 이를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고 안전 가이드라인 배포(6.3, 4,500부), 사례·공정별 검색시스템 제공(9월, CSI), 주요 사고 영상 제작(3회), 웨비나 개최(5회)등을 통해 주요 사고사례를 공유하여 현장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그간 안전대책의 현장이행을 보다 강화하고, 건설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광주 화정 붕괴사고('22.1.11)이후 마련된 근본적인 안전강화 대책의 조속한 이행으로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 특히, 전문기관의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 안전성 검토*를 고위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게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1·2종 시설물 등 고위험 공공공사 적용

- 전국 1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총 45,690여 개소^{2023.1.25. 기준} 중 52%인 23,777개소(민간 17,816개소, 공공 5,961개소)를 일제 점검하되
- 지난해 광주 아파트 사고와 유사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층 건축현장 3,800여 개소는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토관리원에서 개발한 위험도평가 시스템(빅토리) 중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여 점검대상 공사 선정을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사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 현장을 예측

- 그밖에,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공법을 사용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중점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향후, 최신 사고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AI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추출하고 점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